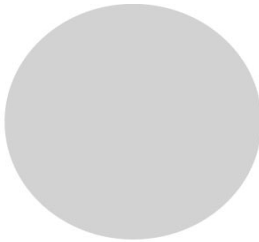


제7절 건설방재 행정

1. 균형있는 지역개발
2. 도로망 확충 및 교통질서 확립
3. 재난재해 관리
4. 지역민과 함께하는 열린 토지행정 구현
5. 영산강 살리기 추진
6. 빛가람 혁신도시 건설



제7절 건설방재 행정

1. 균형있는 지역개발

1-1. 지역개발의 활성화

가. 주요 SOC시설의 획기적 확충

(1) 도로건설

서해안 고속도로는 2001년 말에, 88올림픽 고속도로 및 장성~담양간은 2006년에 완공하였고, 2007년에는 고창~장성간, 2008년에는 무안~광주간을 2011년 4월에는 전주~광양간은 개통하였으며, 영암~순천간은 '12. 4월 개통하였다. 또한, 광주~완도간은 2005년 6월 기본설계를 착수하여 2011년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였고 2014년 실시설계 착수 건의 중이다.

국도 4차로 개설사업은 국도 77호선 등 미개통 구간과 국도대체우회 도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도에서는 화원~삼포 등 국가지원지방도 8개 지구와 유치~이양간 등 지방도 41개지구를 추진하고 있고 시·군별로 군도·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을 통하여 도로망 확충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표 2-336〉 연도별 도로현황

(단위 : km, %)

구분	2010		2011		2012	
	연장	포장률	연장	포장률	연장	포장률
계	10,271	69.3	10,267	72.5	10,289	74.0
고속도로	271	100	271	100	313	100
국도	2,004	94.8	2,012	95.1	2,002	95.0
지방도	2,303	71.7	2,293	73.1	2,295	76.6
시군도	5,693	61.7	5,691	63.0	5,679	70.7

※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표 2-337〉 사업추진 실적(2012년)

(단위 : km, 억원)

도 로 별	사 업 량		사 업 비
	지 구 수	연 장	
총	100	79.3	12,449
고속도로	1	15.7	3,124
일반국도	34	27.1	3,398
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	12	8.7	1,788
국가지원지방도	8	7.6	950
지방도	41	22	903



건설방재국 도로교통과장 위광환, 도로계획담당 최봉현, 도로시설담당 한병선,
담당자 이정국, 양시봉

(2) 철도건설

1) 보성~임성간 철도신설

목포권과 광양만권을 연계하는 철도망 구축과 동서간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1998년 12월 확정된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반영되었고, 2000년도에 기본계획(용역비 40억원) 완료 및 경제성(B/C 1.04)이 인정되어 2003년 12월 2개 공구 17.5km가 턴키공사로 착공하였으나 '07년 국토교통부의 준공사업 우선추진 방침에 따라 공사가 중단되었으며 '09년 국가기간철도망 구축사업 추진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타당성 재조사를 하여 당초 복선전제 단선으로 계획된 사업계획을 단선으로 계획이 변경되어 '13년 현재 설계중에 있어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 '14년 재 착공 계획인 보성~임성간 철도 사업은 목포와 부산을 연결하는 남해안철도 구간으로 동서회합은 물론 남해안 권역 동반성장 및 동북아 경제권 구축을 위한 교통 문화 교류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시급히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 준공될 경우 목포~부산이 1시

간대로 단축되어 본격적인 남해안시대 개발 및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2) 호남고속철도 건설

서울~목포간 352km 호남고속철도 건설은 경부고속철도와 양축을 형성하여 국토의 균형개발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경부고속철도의 사업계획이 경제현실에 맞게 재조정됨에 따라 호남고속철도도 1999년말까지 사업계획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 작업을 마치고 국가기간 교통망 계획에 반영되었다.

2003년 11월까지 50억원을 투입하여 기본계획 조사연구 용역을 완료하였고, 2004년 10월 중부권 분기역 선정을 위한 기본계획 조사연구 보완용역을 시행하여 2005년 6월 중부권 분기역을 오송역으로 확정하였으며,

2006년 8월 기본계획고시, 2008년 11월 기본설계를 완료하였고, I 단계 구간인 오송~광주 구간은 2009년 12월 착공하여 2014년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II 단계 구간인 광주~목포 구간은 노선선정 타당성조사 용역이 2011년 2월말 완료되어 국토교통부에서 최종 노선 선정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및 철도산업위원회 상정을 거쳐 '12년 8월 무안국제공항을 경유하는 기본계획 변경으로 무안공항 활성화 등 여건 성숙시 광주송정~무안공항~목포구간 신선을 검토 추진하는 것으로 고시 하였으며, 우리 도에서는 조속히 기본계획을 확정하여 착공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의 중에 있다.

3) 전라선 복선 전철화

신리~동순천간 122.6km 전라선 철도개량사업은 날로 증가하는 광양만권 물동량의 원활한 수송을 위한 사업으로 1988년 12월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1989년 11월 1단계 공사(병목구간 64.3km)를 착수하여 1999년 9월 완공 개통하였고, 2단계구간(기타 구간 58.3km)도 1998년

6월 착공 후 완료하여 현재 운행중에 있다.

이 구간의, 복선전철화 사업도 2001년 12월~2004년 12월 실시설계 완료 후 2005년 7월 착공하여 2011년 11월 준공 개통되어 운행중이고, 고속화사업을 위한 차상신호시스템이 잔여사업비로 추진 2012년 5월초 완전 개통됨에 따라, KTX 운행은 물론 수송능력 향상으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순천~여수간 34.8km에 대해서는 3개 공구로 분할, 성산~신풍간 1공구와 여천~여수간 3공구는 2002년 턴키공사로 발주, 신풍~여천간 2공구는 2003년 실시설계 완료 후 착공 2007년 전철화 설계 후 2011년 11월말 개통되었으며, 고속화사업을 위한 차상신호시스템을 구축하여 2012년 5월 완전 개통되어 2012여수세계박람회 성공적인 개최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건설방재국 도로교통과장 위광환, 철도공항담당 김정남, 담당자 서영배

(3) 공항 건설

1) 여수공항 확장

여수국가산업단지 확장, 울촌 1.2산단 조성, 광양컨테이너부두 건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등 광양만권의 개발에 따른 급증하는 항공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1997년 12월 실시설계를 마치고, 1998년 8월부터 용지보상을 시작하여 1999년까지 1,022 필지에 대한 보상비 440억원을 지급 완료하였다. 1998년 12월부터 공사에 착공하여 2004년 11월 신설 활주로와 관제탑을 완공하고 2005년 11월 여객터미널 계류장 주차장 등을 완공, 동월 24일 개청식을 개최하였다. 여수공항 확장으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의 투자활성화는 물론 수도권 등과 육상교통이 불편한 여수, 순천, 광양지역의 항공 교통수요 처리능력이 향

상되었으며, 활주로 추가확장이 이루어지면 한려해상공원을 찾는 관광객 유치에 상당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2) 무안국제공항 건설

대불.삼호산단의 활성화와 한.중 경제교류 활성화 등으로 국내.외 항공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광주공항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호남권의 중심거점 공항건설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1998년 10월까지 기본설계를 마쳤으며, 1998년 12월 설계와 시공을 일괄 입찰하여 실시하는 턴키방식을 채택, 1998년 12월에 착공하여 2007년 11월에 준공과 함께 개항되었다.

본 국제공항 완공으로 호남권 거점 항공수요를 담당하게 됨으로써 한.중 교류확대, 서남권 투자활성화, 농산물 수출 여건개선으로 지역개발 촉진과 관광객 유치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추진
부서

건설방재국 도로교통과장 위광환, 철도공항담당 김정남, 담당자 서영배

(4) 화물자동차 휴게소 및 공영차고지 건립 추진

화물물류기지로서의 역할과 깨끗한 교통환경조성을 위하여 지난 2011년 1월에 목포 화물공영차고지 건립(4,115㎡, 화물차 77대)을 시작으로 강진군 성전면에 110억원(국비 33억, 지방비 77억)을 투자하여 총면적 14만 6,975㎡에 대형화물차 800대를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화물공영차고지를 건립하여 전남화물자동차 운송협회에서 위탁을 받아 임차해 운영중이다.

2012년 1월에는 순천시 서면에 4만 1,956㎡ 규모로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SK에너지(주)와 함께 사업비 197.4억원(국비 및 시비 139억, 민간투자 58.4억)을 투자하여 총341대(화물차 226, 승용차 115)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화물공영차고지를 건립하여 운영중이며, 이 외에도

여수시 주삼동에 올해 8월말 건립을 목표로 46,932㎡ 면적에 총 404대 (화물차 202, 승용차 144, 택시 58)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과 함께 주유소, 경정비소, 편의동 등 화물자동차 휴게소가 건립될 예정이며, 광양과 나주에도 2014년도에 건립 목표로 화물공영차고지를 지속적으로 확충함으로써 화물운송사업 활성화를 도모함은 물론 화물운수 종사자들의 복지향상과 밤샘주차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 등에 의한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설방재국 도로교통과장 위광환, 교통정책담당 윤연화, 담당자 이종연

나. 건설업체 등록관리

2012년 12월 31일 현재 일반건설업체는 938개 업체, 전문건설업체는 4,042개 업체가 등록되어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다.

〈표 2-338〉 연도별 건설업체 등록추세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일 반	998	981(감1.7%)	949(감3.3%)	938(감1.2%)
전 문	3,909	4,006(증2.5%)	4,007(증0.02%)	4,042(증0.8%)

1999년 건설업 면허제를 등록제로 전환한 후 급격히 증가하였던 건설업체가 최근 4대강 사업 등 대형공사에 정부예산이 집중되어 신규사업이 감소하고 전남도내 건설업체의 공사 수주액도 전년대비 6.2%로 다소 증가하였으나 과거 해마다 감소된 수주액 대비 증가 폭은 극히 미미하며 일반 건설업체 등록의 경우 전년대비 1.05% 감소하였다.

이와 더불어 정부에서는 복지공약의 확대에 의하여 건설투자 또한

감소해 나갈 계획이다. 따라서 지역건설업계도 공정하고 투명한 건설 문화 정착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구책 등을 강구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표 2-339〉 2012년도 건설업체 행정처분 현황

계	등록말소	영업정지	과징금·과태료	시정명령
219업체	31	101	2	85

한편, 2012년 한 해 동안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일반건설업체는 등록말소 31개 업체, 영업정지 101개 업체(등록기준 미달 등)이며 하도급계약 발주처 미통보 등 신고의무를 해태한 2개 업체에 대하여는 과태료 등을 부과하였다.



건설방재국 지역계획과장 신태욱, 건설정책담당 최정희, 담당자 정경숙

다. 건설기계관리

도내 영세 건설기계 사업자의 보호 육성을 위해 불합리한 제도를 발굴, 개선시정 함은 물론 건설기계 사업자 신고 처리기간을 법정처리기간의 1/3 이내로 단축 시행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 해소에 크게 기여하였다.

〈표 2-340〉 건설기계 등록현황

(단위 : 대)

계	불도저	굴삭기	로우더	지게차	덤프트럭	기중기
26,292	156	9,854	1,212	8,380	3,574	597
모터 그레이더	로울러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	타워크레인	아스팔트 휘니셔	아스팔트 살포기
27	309	1,336	275	78	36	7
쇄석기	공기압축기	천공기	항타 및 항발기	사리채취기	준설선	특수 건설기계
24	146	249	17	1	10	7

〈표 2-341〉 건설기계 사업자 신고현황

(단위 : 업체)

계	건설기계대여업			건설기계 정비업	건설기계 매매업	건설기계 폐기업
	소 계	일 반	개 별			
711	502	313	189	116	54	39



건설방재국 도로교통과장 위광환, 교통안전담당 김태형, 담당자 손예정

1-2. 개발제한구역의 관리

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현황

우리 도 개발제한구역은 광주권 287.11km²를 1973년 1월 17일 지정 관리하였으나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방침에 따라 2001년 5월 3일 나주 학림마을 등 경계선 관통취락 3개소, 0.045km²를 해제하고 구역 내 20호 이상 집단취락 212개소, 10.398km²를 2004년말 해제하였으며, 2006년 12월 나노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장성 진원.남면일원 0.807km²를 해제하고 2009년까지 해제취락에 대한 계획적인 관리를 위해 지구 단위계획 수립 시 4.130km²를 해제하여 2012년 12월말 현재 271.730km²를 개발제한구역으로 관리하고 있다.

〈표 2-342〉 광주권 개발제한구역지정 시군별 현황

(단위 : km², 가구, 명)

구 분	시 군	계	나 주	담 양	화 순	장 성
		면 적	당 초	287.11	42.9	115.18
	현 재	271.73	39.536	108.677	41.230	82.287
가 구	당 초	9,958	2,313	4,502	351	2,792
	현 재	635	115	290	70	160
인 구	당 초	27,923	5,712	13,138	982	8,091
	현 재	1,358	280	528	135	415

나. 개발제한구역 관리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연 단속요원 84명, 단속장비 44대 등을 투입하여 위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한 경계표석 3,186개소, 초소 20개소, 입간판 114개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초소, 경계표석, 입간판 등은 집단취락이 해제됨에 따라 2010년까지 665백만원(국비 50%, 시군비 50%)을 투입하여 해제지역에 대한 표석 이전 및 보수를 전면 실시하였다.

또한 2012년까지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나주시 등 4개 시군에 국비 488억원과 시·군비 171억원 등 총 659억원을 투입하여 마을진입도로정비 등 276개 사업을 추진하였다.

개발제한구역내 주민들의 재산권 제약과 생활 불편에 따른 지속적인 규제 완화와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예방차원의 단속에 주안점을 두고 시·군, 국토부, 도에서 지도·단속을 실시한 결과 2012년도에 28건의 위법 행위를 적발하여 자진철거와 원상복구 조치하였다.

추진
부서

건설방재국 지역계획과장 신태욱, 경관도시계획담당 김장환, 담당자 이범재

1-3. 지역특성에 맞는 도시개발 추진

가. 효율적인 택지개발 사업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인구의 증가 및 핵가족화로 인한 도시 주택난을 해결하고 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 도시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구획정리사업에 관한 택지조성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우리 도내에 추진한 택지개발사업은 3종의 사업으로 총 81지구

31,605천㎡, 투자사업비는 4조 2천억 규모이며, 유형별로 분류하면 택지 개발사업 24지구, 도시개발사업 24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33지구이다.

추진내역별로 구분하면, 사업완료가 61지구 15,497천㎡, 추진중인 사업은 20지구이며 추진중인 사업을 유형별로 보면 택지개발사업 4지구, 도시개발사업 1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5지구로서 주택용지 수용에 대처해 나가고 있다.



건설방재국 지역계획과장 신태욱, 경관도시계획담당 김장환, 담당자 최순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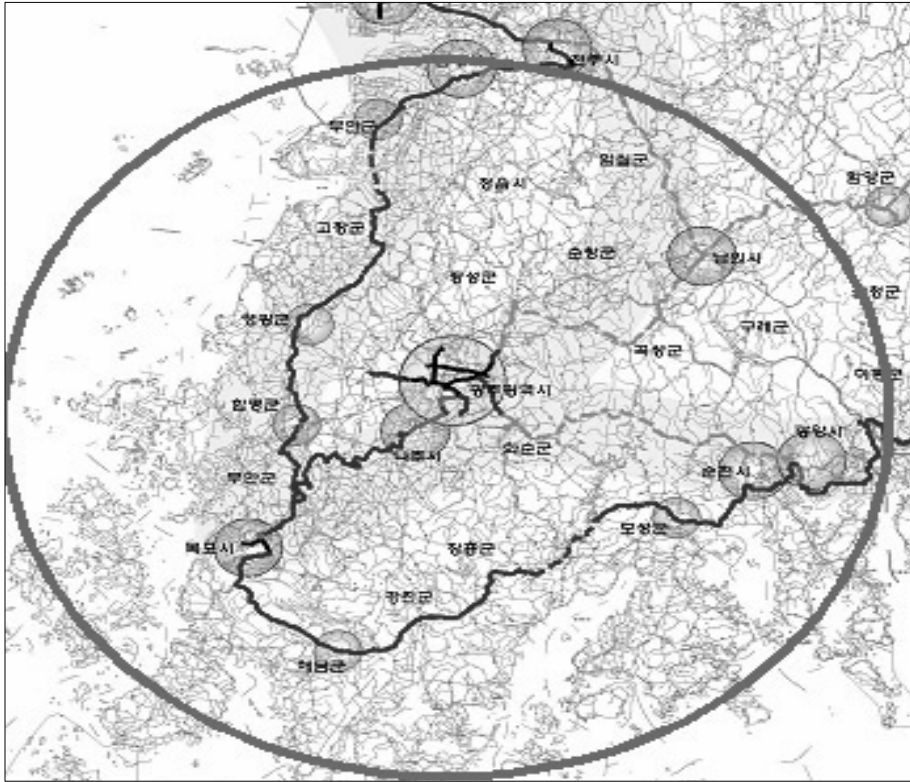
나. 자전거 도로 사업 추진

(1) 자전거 도로사업

정부에서 추진 중인 『녹색성장』사업과 연계하여 도심지의 심각한 도시교통 및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도민 건강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타기 생활화 운동을 적극 펼치고 있다.

또한 정부에서 2010년부터 추진 중인 『전국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사업('10~'19)』과 관련하여 우리 도에서는 사업 시행년도 3년차 사업으로 광양 등 9개 지역 60.1km구간에 걸쳐 277억원을 투입 자전거도로를 개설 중에 있습니다.

전국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사업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국가자전거도로 기본계획”을 2010년 7월 8일 확정하였으며 우리 도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목포, 순천, 광양, 보성, 영암 등 도내 12개 지역 267km 구간에 대해 1,251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추진
부서

건설방재국 지역계획과장 신태욱, 지역개발담당 정현인, 담당자 이종현

다. 국토계획의 패러다임 변화

(1) 도시계획분야

2003년 1월 1일 제정·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관리지역으로 세분화를 실시하였으며, 도시의 급속한 발전이 예상되는 광주광역시 연접 시군과 10만 이상 도시, 기업도시가 지정된 군 지역에 대하여는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 시군에 대하여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선 계획 후 개발』 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된 지역은 12개 시·군으로 목포·여수·순천·나주·광양시와 담양·화순·해남·영암·무안·함평·장성군이며, 도시(군)관리계획은 2011년도까지 22개 시·군이 완료하였다.

그리고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에너지 과소비형 도시를 녹색기술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녹색도시로 개편하는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정부 방침이 결정됨에 따라 새로운 도시계획의 패러다임이 형성되고 있다.

이에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추진하고 주민불편해소 및 투자유치와 관광단지 조성 등 토지구제완화를 위하여 2012년 한 해 동안 도시계획위원회를 21회 개최하여 총 67건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등을 추진하였다.

(2) 광역도시계획분야

광역도시계획은 2개 이상 시·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연계 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것으로 향후 20년을 내다보는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우리 도에는 광주권과 광양만권 광역도시계획, 서남권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2010년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광주권 광역도시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았다.

먼저 광주권 광역도시계획은 광주광역시를 포함한 나주시·담양군·장성군·화순군 전 지역과 함평군 해보·월야·나산면 일부지역을 포함한 2,995km²이며 계획기간은 2020년, 계획인구는 220만명으로 2003년 9월 24일 국토해양부로부터 승인되었다.

정부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2008년 9월 30일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을 추가 해제기로 심의의결됨에 따라 당초 해제가능면적 20,719km²의 30%인 6,214km²를 추가 해제가능면적으로 확보하여 총 26,933km²중 15,380km²를 해제하고, 잔여

면적 11.553km²를 개발수요에 따라 해제할 계획이다.

광역시설로는 광주외곽 순환고속도로 계획과 광주~완도간, 광주~무안간고속도로, 경전선 직복선화 및 지하철의 나주.화순 연장 등이 반영되어 있다.

광양만권 광역도시계획은 여수.순천.광양시 등 3개 도시의 연담.광역화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됨에 따라 광양만권 전역이 포함된 5,279km²이며, 계획기간은 2025년 계획인구는 115만명으로 2006년 5월 4일 국토해양부로부터 승인되었다.

주요내용으로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과 2012 여수세계해양박람회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토지이용계획과 도로.철도 등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데 있다.

특히 경제자유구역을 국제교역 및 국제문화 배후도시로 성장 시키고 전주~여수 간 고속도로와 목포~광양 간 고속도로를 계획하였으며 여수~묘도~광양을 연륙하여 순환도로 체계를 갖추고 3개 시를 순환하는 경전철을 계획하였으며 광양항을 국제교류 허브항으로, 여수항을 관광 허브항으로 개발한다는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다.

서남권 광역도시계획은 도청이전, 기업도시와 무안 국제공항건설 등 서남권 발전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계획으로 목포, 무안, 영암, 해남군 전 지역과 완도.진도.신안 일부지역이 포함된 3,711km²을 2025년 90만명의 인구를 갖는 광역도시를 성장시키겠다는 밑그림을 그리기 위한 계획으로 2009년 3월 30일 국토해양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2순환 6방사형의 교통축과 호남고속철도의 무안공항 경유, 무안공항과 남악 등을 연결하는 경전철 건설 계획이 반영되었으며, 섬 개발의 활성화와 국비지원을 위하여 다도해 특정지역 지정 계획과 영산강 살리기 등 대규모 프로젝트가 반영되어 있다.

광역도시계획은 시.군에서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 각종 개발계획에

반드시 반영하여야 하고, 국가계획 수립 시 광역도시계획을 근거로 수립하게 되며, 자치단체 간에 대립되는 대규모 시설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계획으로 계획 간에 협의 조정은 광역도시계획협의회를 통하여 조정해 나가고 있다.

(3)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해소를 위해 불요불급하거나 불합리한 시설은 과감히 해제 또는 조정하고 주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것은 가급적 존치하였으며,

면급 도시 내 사유토지로서 급경사지에 결정되어 사실상 조성이 어려운 어린이 공원은 폐지하고 시군 재정여건상 대지에 대한 보상계획과 또는 재원 조달계획을 포함하여 실현가능한 집행계획이 수립될 수 없는 시설은 원칙적 폐지 검토하였고

2012년 12월말 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대지에 대하여 매수 청구된 토지는 74천㎡에 27억원이 청구되어 47천㎡를 17억원을 투입 매수하였으며 잔여 매수 청구된 토지는 매수여부 결정 후 조치할 계획이다.

추진
부서

건설방재국 지역계획과장 신태욱, 경관도시계획담당 김장환, 담당자 임오중

1-4. 전남의 산업기반 현황

가. 권역별 산업구조 현황

1970년대 중반부터 산업화가 시작된 이후 여수 석유화학단지를 중심으로 광양제철 등 광양만권에 산업 생산성 집중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 지역이 전남 제조업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제조업체수의 8.0%에 불과하지만, 생산액에서는 30.0%를 점유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장치산업은 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생산원가 상승, 공해유발, 제조업종의 단순화 등으로 인해 최근 중국의 중화학공업이 급부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광양만권은 시설의 현대화, 새로운 기술개발 등으로 대외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한편 목포 등 서남해안권의 산업생산 비중을 보면 단순 농수산물 가공 등 소규모 가내공업화 형태가 대부분이나 대불 국가산업단지 및 삼호 일반산단이 활성화되어, 영산강 유역의 대단위 간척 사업의 지속적인 개발과 조선산업 클러스터 구축 등으로 향후 성장 가능성이 큰 지역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또한 서남권 신산업지대 철도가 완공되고 대불산단~삼호산단간 목포 신외항 배후철도 건설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있으며 호남선 복선화(송정~목포), 무안 국제공항 건설 완공 등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으로 주변 발전여건이 크게 호전되고 있다.

동남아 등 중국 진출의 지리적 장점도 있어 낙후된 이 지역이 물류 산업과 조선산업의 메카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주시, 장성군, 담양군, 화순군 등 광주시 인근지역과 전남 전지역에서 조성중이거나 계획중인 산업단지는 광주시에 비해 지가가 싸고, 시장 접근성, 인력조달 및 정보수집 용이, 편리한 교통망 등의 입지여건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나. 산업단지조성 현황

전남지역에 산업단지로 지정승인을 받아 조성되었거나 조성중인 국가산업단지로는 여수, 여수 삼일비축, 광양, 영암대불, 빛그린 국가산업 단지가 있고 일반단지는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등 16개 시군에 29개 소가 있다.

〈표 2-343〉 전남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현황('12. 4분기)

(단위 : 천㎡)

시 군	산 업 단지명	지정면적	분양 대상	분 양 현 황				비고
				분양공고 (A)	분 양 (B)	미분양 (A-B)	분양률 (B/A)	
합 계	34개소	240,897	108,961	72,335	69,960	2,375	96.7	
국가산단	5개소	173,922	65,060	57,989	57,633	356	99.4	
영 암	대 불	20,887	8,260	8,260	7,904	356	95.7	
광 양	광 양	96,405	26,167	22,119	22,119	-	100	
여 수	여 수	50,253	25,583	24,168	24,168	-	100	
"	삼일비축	4,152	3,442	3,442	3,442	-	100	
합 평	빛 그 린	2,225	1,608	-	-	-	-	
일반산단	29개소	66,975	43,368	251	175	76	85.1	
목 포	삼 진	278	228	170	170	-	100	실수요자
"	대 양	1,565	1,082	-	-	-	-	
"	세라믹	116	95	81	5	76	6.2	
여 수	오 천	222	131	131	131	-	100	
"	울 촌 1	9,172	6,096	4,986	4,786	200	96.0	
"	울 촌 2	3,792	2,333	-	-	-	-	
"	울 촌 3	9,762	5,603	-	-	-	-	
"	묘 도	368	368	-	-	-	-	
순 천	순 천	583	461	448	448	-	100	
"	해 룡	1,592	1,177	211	211	-	100	
나 주	문 평	69	69	69	69	-	100	
"	나 주	549	417	417	317	100	76.0	
"	미 래	2,954	2,064	96	96	-	100	
"	신 도	299	227	227	158	69	70.0	선분양
광 양	황 금	1,120	1,120	-	-	-	-	
"	신 금	401	293	293	153	140	52.2	
"	익 신	474	369	-	-	-	-	
"	세 풍	3,000	1,745	-	-	-	-	
고 흥	도 양	2,758	1,814	-	-	-	-	
보 성	신소재	1,952	1,254	-	-	-	-	
화 순	생물의약	755	397	219	219	-	100	
장 흥	바이오식품	2,914	1,308	1,216	125	1,091	10.3	
강 진	환 경	657	410	-	-	-	-	
해 남	회원조선	2,058	1,497	1,044	1,044	-	100	
영 암	삼 호	2,971	2,428	2,428	2,428	-	100	실수요자
영 광	전기자동차	1,652	1,094	1,094	751	343	68.6	
장 성	나 노	902	624	-	-	-	-	
진 도	군 내	685	539	385	385	-	100	실수요자
신 안	조선타운	13,355	8,125	-	-	-	-	

1-5. 산업단지 조성

가. 빛그린 국가산업단지 조성

빛그린 국가산업단지는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광주.전남의 경쟁력 강화와 미래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광산구 삼거동, 함평군 월야면 일원을 국가산업단지로 지정.개발하여 주도로 건의하여 국



토연구원에서 수립한 개발타당성 검토연구 용역결과를 토대로 4.08km² (123만평)의 부지에 총사업비 6,363억원을 투입, 생물.의약, 신소재, 광산업, 자동차 부품 등을 유치하는 계획에 따라 2009년 9월 30일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었다.

빛그린 국가산단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기초지자체의 내생적.상생적 발전에 기여하고 광주.전남의 미래성장 동력산업 육성의 거점을 확보하기 위한 구상으로 주거용지 2.6%, 산업시설용지 63.2%, 지원시설용지 2.2%, 물류유통시설 1.0%, 공공시설용지 31%의 토지 이용계획을 수립하였다.

단지를 개발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2013년도까지 보상을 마무리하고 2013년 하반기에 착공하여 2016년까지 조성 완료계획으로 있으며 이로 인하여 생산유발효과 11조 8,700억원, 고용유발효과 5만 7천명 등의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추진
부서

건설방재국 지역계획과장 신태욱, 산단조성담당 최인규, 담당자 조 준

나. 영광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 조성

전라남도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산업단지와는 차별화된 친환경 산업단지 개발을 위해 노력한 결과 2009년 4월 23일 전라남도, 영광군, (주)탑건설, (주)KCC건설과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투자이행협정(MOA)를 체결하였고,



영광군과 민간개발업체, 금융권들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합동개발(제3섹터) 방식의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여 영광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를 추진하였으며, 2009년 12월 4일 착공식에 앞서 지방 산업단지 최초로 이명박 대통령이 현장에 방문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였다.

영광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는 미래 성장산업으로 대두되고 있는 환경산업육성을 위해 전국 최초로 차세대 전기자동차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으로 영광군 대마면 송죽리 일원 1,641천㎡(50만평)에 총 사업비 1,900억원을 투자하였고, 음료식품 제조업,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 기계.장비 제조업 등을 유치하여 1조 5천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9,000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주)에코넥스(전기자동차)를 비롯한 30개 업체가 분양계약을 완료하여 분양용지 1,096천㎡ 중 795천㎡가 분양되어 현재 선분양율 80%에 달하고 있으며, 입주 희망기업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영광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는 2009년 12월 4일 착공하여 2013년 5월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도내 산업용지 공급 해소와 지역경제 발전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고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으로 비교 우위를

갖춘 입지경쟁력을 확보하여 서북부권의 산업발전 신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방재국 지역계획과장 신태욱, 산단조성담당 최인규, 담당자 조 준

다. 장흥 바이오식품산업단지 조성

장흥 바이오식품산업단지는 장흥군 장흥읍 해당리 일원 2,919천㎡(약 88만평) 규모에 총 사업비 약 2,168억이 투입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으로서, 북측에는 888천㎡규모의 체육시설용지(골프장)와 남측에는 산업단지 2,031천㎡를 조성할



목적으로 2008년 12월 12일에 일반산업단지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을 승인, 2009년 5월 27일에 실시계획 승인 되어 2009년 11월 9일 공사 착공하여 현재 75% 공정율로 순조롭게 조성 중에 있다.

장흥 바이오식품산업단지는 전라남도의 부족한 산업용지를 제공하여, 전라남도 중남부권의 지역산업의 기반구축,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균형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단지 토지이용계획은 산업용지 41.8%, 상업 및 지원시설용지 2.5%, 주택건설용지 0.6%, 공공시설용지 13.7%, 체육시설용지 24.2%로 구성되며 특히, 공원 및 녹지 비율을 17.2%로 법정 비율보다 훨씬 높게 확보하여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룬 친환경 산업단지로서의 면모를 갖추도록 개발계획을 수립하였다.



건설방재국 지역계획과장 신태욱, 산단조성담당 최인규, 담당자 곽재영

1-6. 농공단지 현황

가. 농공단지 조성현황

우리 도의 농공단지는 지난 1984년부터 조성을 시작하여 2012년말 까지 21개 시·군 57개 단지(9,958천㎡)를 지정하여 48개 단지를 조성완료 하였고 9개 단지는 조성 중에 있다.

규모는 165천㎡미만 37개소, 165천㎡이상~331천㎡미만 17개소, 331천㎡이상 3개소로 331천㎡미만이 전체 95%를 차지하고 있다. 농공단지중 가장 넓은 면적은 목포시 산정농공단지로 530천㎡이다.

2012년 말 보상 및 조성중인 농공단지는 9개소(남평, 장흥, 장평 2, 땅끝, 해보, 송림, 식품특화, 해양생물, 군내)로 8개소는 공영개발방식, 1개소(영광식품특화)는 민간개발로 추진중이다.

신규 농공단지는 전남 서남권을 중심으로 조선관련 농공단지가 조성되어 조선산업의 중심지로 발전할 전망이며, 장성, 담양 등 광주 인근 지역은 삼성전자, 기아자동차 등 부품소재 산업의 발전이 예상된다. 연도별 농공단지 조성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2-344〉 연도별 농공단지 지정 현황

(2011. 12월말 기준)

구 분	소 계	'84~'93	'94~'97	'98~'05	'06~'09	2010	2011	2012
단지수	57	33	2	5	8	1	3	5
면적(천㎡)	9,958	5,865	374	1,184	1,212	257	407	659

추진
부서

건설방재국 지역계획과장 신태욱, 산단조성담당 최인규, 담당자 조 준

나. 분양현황

2012년 12월 현재 조성 완료된 농공단지 48개 단지의 분양률(조성중인 9개단지 제외)은 98%이며 7개 농공단지(목포 산정, 구례 간전, 안도, 완도 죽청, 담양 에코, 보성 조성, 강진 칠량)를 제외하고 도내 모든 농공단지는 100% 분양을 완료한 상태이다.

또한 농공단지 51개 단지 산업용지는 7,249천㎡로서, 분양대상면적 6,857천㎡중 6,709천㎡가 분양되었고 3.3㎡당 평균 분양가격은 221천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낮은 가격으로 분양되고 있으며, 우리 도의 농공단지 분양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2-345〉 농공단지 분양 현황

(2011. 4분기 기준)

구 분	지정면적 (천㎡)	조성완료 (천㎡)	분 양 현 황				평당분양 가격(천원)
			분양대상	분양면적	미분양	분양률	
농공 단지	57개 단지 9,958	48개 단지 8,635	6,855	6,717	140	98	222



건설방재국 지역계획과장 신태욱, 산단조성담당 최인규, 담당자 조 준

1-7. 개발촉진지구 지정·개발

개발촉진지구 선정기준은 지정목적에 따라 낙후지역형, 도농통합형, 균형개발형 등 3가지로 분류된다.

“낙후지역형”은 개발수준이 타 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지역으로 인구증가율, 재정자립도, 제조업인구 비율, 도로율, 평균지가 등 5개의 지표 중 2개 이상이 전국 하위 20%에 속하는 지역이 해당되며, “도농 통합형”은 도농복합형태의 시설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도시에서 새로운 소득기반조성을 위하여 인근지역과 연계 개발

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 해당된다.

“균형개발형”은 광역개발권역에 속하는 지역으로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집중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이 대상이 된다.

위 3가지 유형 중 중앙정부의 집중지원이 보장되는 개발형태는 낙후 지역형으로 지난 '09. 6. 12에는 정부의 “성장촉진지역”으로 재정지원 및 국가지원사업으로 재분류되어 나주시 등 17개 시·군이 개발촉진지역 및 도서종합개발사업이 가능하게 되었다.

〈성장촉진지역(개발촉진지구+도서종합개발)〉

전남(17)	나주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함평군, 무안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영광군
--------	---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은 1차 신안·완도, 2차 곡성·구례, 3차 장흥·진도, 4차 보성·영광, 5차 화순·강진, 6차 장성, 7차 함평, 8차 고흥지역이 연차적으로 지정되어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6차~8차 지역이 단위사업별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관련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2-346〉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현황

구 분	대상지역	지 정 면 적	사 업 계 획	사업기간	총사업비 (억원)
1차지구	신안·완도	180km ²	완도~신지, 암태~팔금연륙(연도)교 등 3개 사업	1996~2008	953
2차지구	곡성·구례	234km ²	고달~산동간 도로 개설 사업 등 12개 사업	1997~2008	3,411
3차지구	장흥·진도	210km ²	회진~용산간도로 개설 사업 등 23개 사업	1999~2008	3,627
4차지구	보성·영광	240km ²	금천~옥전간 도로개설 사업 등 17개 사업	2002~2007	1,954
5차지구	화순·강진	238km ²	화순 군도11호선 도로개설 사업 등 34개 사업	2002~2010	2,761
6차지구	장성	78km ²	홍길동 테마파크등 20개 사업	2008~2017	6,926
7차지구	함평	22km ²	나비산업특구 기반조성사업 등 16개사업	2010~2019	4,094
8차지구	고흥	60km ²	우주해양리조트 특구 조성사업 등 16개 사업	2011~2019	12,806

2008년 이후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장성군, 함평군, 고흥군은 공사를 추진중에 있으며,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면 여러 가지의 감세혜택이 주어지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발촉진지구 내 중소기업 입주세 세제혜택 내용>

○ 국세인 소득세·법인세에 대하여 4년간 50%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및 64조)

○ 지방세인 취득세는 전액감면, 재산세는 5년간 50%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

앞으로 도 내 개발촉진지구에 대한 사업이 계획대로 완료되면 낙후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생활수준이 향상되어 지역균형개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추진
부서

건설방재국 지역계획과장 신태욱, 지역개발담당 정현인, 담당자 강철홍

2. 도로망 확충 및 교통질서 확립

2-1.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가. 대중교통 육성 지원사업 추진

운송사업자의 재정지원을 통한 경영개선 및 대중교통의 육성으로 오지.도서.벽지지역 등의 교통여건을 개선하여 주민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를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세부적인 지원 내용으로 우리 도에서 관할하는 시외버스 6개 업체에 7,989백만원을, 시장.군수가 관할하는 22개 시군의 시내.농어촌버스 50개업체에 7,687백만원 등 15,676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그 밖에도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785백만원, 오지.도서 공영버스 35대 구입비 629백만원, 저상버스 및 장애인콜택시 구입비 지원으로 1,379백만원을 지원하였다.

이에 따른 제도개선사항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국토교통부)에 의하여 추진 중인 저상버스 도입목표를 시내버스 운행대수의 30%이상을 보급.운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저상버스는 대형버스로만 출시되고 있으므로 중형.좌석버스를 제외한 대형버스 운행대수의 30%로 조정할 것을 건의하였다. 우리 도 저상버스 운행대수는 41대로 국토교통부의 보급목표를 204대 보다 낮은 사유는 농어촌지역 CNG 충전소 부재 및 도로여건상 과속방지턱.굴곡도로가 많아 저상버스 운행이 어려운 실정으므로 국토교통부에 농어촌 여건을 감안한 한국형 중형저상버스 개발 보급과 도로, 보도 등 인프라 구축 후 도입할 것을 건의하였으며, 또한 저상버스는 일반버스에 비해 2배가량 비싸고 과다

운영비 소요로 지속적인 차량 구입비 및 운영비에 대한 국비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다.



건설방재국 도로교통과장 위광환, 교통정책담당 윤연화, 담당자 이종연

나. 운수종사자 친절서비스 교육

자동차 운송사업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안전의식을 고취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이용객에 대한 친절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2012년에는 21,035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 연수원의 운영비 1,000백만원을 보조하였다.

〈표 2-347〉 연도별 운수종사자 교육실적

(단위 : 명)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18,444	18,180	20,331	19,088	20,308	21,035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신규채용자	1,071	989	1,044	1,211	949	1,164
보수교육	17,373	17,191	19,287	17,877	19,359	19,871

〈표 2-348〉 연도별 교통연수원 운영비 보조현황

(단위 : 백만원)

2006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550	600	750	900	1,000	1,000



건설방재국 도로교통과장 위광환, 교통안전담당 김태형, 담당자 이병래

2-2. 교통체계관리 개선

우리 도의 교통체계 관리개선 사업은 저비용 투자로 단기적인 교통편익을 얻기 위하여 기존 시설을 이용한 서비스의 극대화에 초점을 두고 교통신호기, 신호등, 교통안전 표지판 등을 교체·신설하고 있다.

2012년에는 신호기 1,115개소, 교통안전표지 5,859, 노면표지 8,707, 보행자신호등 73, 잔여시간 표시기 271개소,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320개소를 교체 또는 신설하였다.

또한 도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교통사고 잦은 지점 및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94개소, 어린이 보호구역 개설행업 191개소 등을 대폭 정비·확충하였다.

추진
부서

건설방재국 도로교통과장 위광환, 도로시설담당 한병선, 교통안전담당 김태형
담당자 노주완, 장호훈, 최의진

2-3. 선진 운송질서 확립

가.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적극 추진

우리 도의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감소시키기 위해 교통사고 줄이기를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결과, 2012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1.04% 증가, 사망자수는 416명에서 457명(9.8%)으로 증가하였다.

도에서는 교통안전 시설확충을 위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위험도로 개선사업,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추진하였고

매월 4일 도와 시·군, 경찰, 유관기관 합동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

하고, 시군 반상회, TV, 라디오, 신문 등을 이용한 홍보와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교육, 법규위반자를 대상으로 한 교통법규 위반자 및 운전면허 응시자교육, 71개 초등학교에 대해, 녹색 어머니회 운영, 교통안전담당자 지정, 통학버스 운전자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고, 교통질서 문란행위 지도단속을 연중 실시하였다.

〈표 2-349〉 연도별 도내 교통사고 현황

(단위 : 건, 명)

구 분	발생건수	사 망 자	부 상 자
2012	10,243	457	17,152
2011	10,138	416	17,123
2010	10,041	457	18,843
2009	11,309	497	19,273
2008	10,582	483	18,188
2007	10,591	542	18,087
2006	10,706	542	18,293
2005	10,373	533	17,178



건설방재국 도로교통과장 위광환, 교통안전담당 김태형, 담당자 노주완

나. 교통법규 위반차량 지도단속

교통난 해결의 최우선 과제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 확보에 나서는 한편 불법 주.정차 단속 장비를 확충하고 단속공무원도 증원 시켰다.

또한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여 무면허운전, 신호 위반, 과속운전 등 429,000건, 주.정차 금지구역에 위반한 차량을 207,000건 단속하였다.



건설방재국 도로교통과장 위광환, 교통안전담당 김태형, 담당자 노주완

3. 재난재해 관리

3-1. 재난관리 종합체계 구축

가. 지역 재난관리체제 확립

재난관리는 우선 예방에 중점을 두고 유사시 신속한 수습과 복구 및 긴급구조.구난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관리 책임기관, 유관 기관.단체간의 공조.협조체제 구축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판단, 재난과 관련이 있는 42개 기관.단체의 장으로 도 안전관리 위원회(위원장 : 도지사)를 구성('04. 1. 1.)하여 1년에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시.군에서도 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 시장.군수)를 구성하여 재난대비 체계를 확립하였다.

나. 재난의 효율적 관리

(1) 자연·인적재난 유형별 재난관리

자연·인적재난 사고수습.복구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21개의 재난사고 유형별로 관련 부서를 한데 묶어, 예방, 대비, 대응, 복구 계획을 수립하고 비상시를 대비한 도 재난안전 대책본부를 편성하여 반별(상황총괄반, 행정지원반, 구조구급반, 비상지원반, 자원봉사지원반, 공보지원반)로 임무를 부여하여 부서별 역할을 다하도록 하였다.

또한 긴급구조.구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긴급구조.구난에 필요한 인력장비를 갖춘 92개 기관(소방관서 11, 경찰관서 25, 군부대 3, 의료기관 42, 공공기관 8, 지원기관 2, 행정기관 1)을 지정하고 임무를 부여하여 광역 지원협조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2) 국가기반재난 유형별 재난관리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수송, 산업, 보건·의료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예상될 경우 효율적인 예방대응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국가기반체계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7개 분야의 재난사고 유형별로 관련 부서를 한데 묶어, 예방, 대비, 대응,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비상시를 대비한 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편성하여 반별(상황 총괄반, 행정지원반, 치안 및 구조구급반, 공보지원반)로 임무를 부여하여 부서별 역할을 다하도록 하였다.

자연·인적재난 유형별 담당부서

- | | |
|-------------------------|----------------------------|
| ○ 풍수해대책(방재과) | ○ 전기·유류·가스 재난대책(녹색에너지담당관실) |
| ○ 설해대책(방재과) | ○ 폭발·대형화재대책(방호구조과) |
| ○ 가뭄재난대책(방재과) | ○ 건축물 등 시설물 재난대책(행복마을과) |
| ○ 지진재난대책(방재과) | ○ 통신재난대책(정보화담당관실) |
| ○ 해일대책(방재과) | ○ 독극물·환경오염 사고대책(환경정책담당관실) |
| ○ 항공재난대책(도로교통과) | ○ 산업재난대책(지역계획과) |
| ○ 철도재난대책(도로교통과) | ○ 공연·행사장 안전대책(문화예술과) |
| ○ 도로재난대책(도로교통과) | ○ 황사·폭염대책(방재과) |
| ○ 해상재난대책(해양항만과) | ○ 지하도상가 안전대책(방재과) |
| ○ 방사능방재대책(행정과) | ○ 내수면 유·도선재난대책(방재과) |
| ○ 다중이용업시설 안전관리대책(방호구조과) | |

국가기반재난 유형별 담당부서

- 에너지(전력, 석유, 가스) - 녹색에너지담당관실
- 정보통신(통신구) - 정보화담당관실
- 교통수송(철도, 항공, 화물·대중교통, 도로, 항만) - 도로교통과, 해양항만과
- 산업(산업단지, 외국인산업단지, 주요생산업체) - 지역계획과, 기업유치과
- 의료보건(의료서비스, 전염병, 가축전염병) - 보건한방과, 축산정책과
- 건설환경(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매립시설) - 환경정책담당관실
- 식·용수(식수, 용수) - 환경정책담당관실

추진
부서

건설방재국 방재과장 오광록, 재난안전담당 정종태, 담당자 심홍식

3-2.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관리

가. 주요 위험시설물 지정, 관리 및 해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난 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물을 일제 조사하여 총 4,072개소를 특정관리 대상 시설로 지정하고 이중 시설등급이 A, B, C급은 중점관리 대상시설(4,060), D, E급은 재난위험시설(12)로 구분 지정하여 계절·시기별 재난취약시설에 대해 점검 계획을 수립한 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불안전요인을 정비하고 있으며 특히 재난위험시설에 대하여는 월 1회 안전점검과 위험해소를 위한 장·단기계획을 수립하여('12년 1개소 32억, '13년 이후 11개소 128억) 적극 추진하고 있다.

나. 시설물 안전점검활동 지속 전개

재난사고는 예기치 못한 곳에서 발생하는 만큼 사전 대비를 위하여 건축·토목·전기·기계·화공·소방 등 전문기술직 공무원과 전기·가스 안전공사, 안전관리자문단 등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지적된 불안전시설은 안전 조치를 실시하는 한편 보수·정비에 시간이 소요되는 시설물은 불안전 요인이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적관리 하고 있으며, 2012년도 점검실적을 보면 4,060개소 시설을 점검하여 874개소 573건의 불안전 요인을 지적, 315개소 473건을 시정 완료 하였다.

추진
부서

건설방재국 방재과장 오광록, 재난안전담당 정종태, 담당자 최정배

3-3. 범도민 안전문화운동 전개

가. 『안전점검의 날』 행사

범도민 선진 안전의식 고취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하여 일상생활 주변의 재난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험요소 등을 미리 점검하는 한편 가정, 학교, 교통, 공공, 산업안전 분야별로 총 2,998개 기관 31,620명이 참여한 대대적인 캠페인 전개 및 각종 홍보물 제작 배부, 케이블TV 자막방송, 반상회보 발간 등을 통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병행 실시하고 있다.

나. 시기·계절별 안전사고예방 캠페인 전개

설·추석 명절, 여름 피서철 등 취약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화재·전기·익사 등 각종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연 4회 전통시장, 고속도로 T/G 등 다중이용시설·지역에서 안전문화 홍보물 제작 배포, 생활안전수칙 준수 홍보방송을 통한 민·관 합동 안전사고예방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안전한 녹색전남’ 분위기를 조성하고 행락객 및 도민의 생활안전의식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다. 시민안전봉사자 위촉 운영

사회 전반에 만연된 안전불감증을 해소하고, 온 도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이 보장된 사회조성을 위해 안전문화운동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시민안전봉사자』를 선정 위촉하고, 또한 안전봉사자에 대한 전문지식 함양과 일상생활 안전에 대한 중요성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실제 상황과 접목한 재난안전분야 봉사활동 및 응급처치요령 등에 대한 소양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범도민 안전문화운동 조기 확산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 시민안전봉사자 위촉

- 위촉현황 : 총 3,648명(시.군별 100~455명)
- 구성원 분포 : 통.반장 1,026, 유관기관.단체 763, 국민운동단 510, 시민단체 330, 전문기술자.종사자 215, 기타 804명

라. 권역별 찾아가는 『맞춤형 재난안전교육』 실시

경북 상주시민운동장 압사사고, 고흥 거금도 연도교공사장 붕괴사고 등 안전 불감증에 의한 인적.물적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저소득 취약 계층 세대의 노후 가스.전기시설 정비, 재난피해에 따른 충격의 심리치료 및 자활지원 등 지금까지 행정의 힘이 미치지 못했던 취약부분에 대한 맞춤형 안전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자 우리 도 주관으로 도로교통공단, (사)한국안전 교육강사협회 등 전문기관 강사 3명을 초빙하여 공무원, 사업체 종사자, 도민 등 574명을 대상으로 연 2회 권역별 찾아가는 『맞춤형 재난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추진
부서

건설방재국 방재과장 오광록, 재난안전담당 정종태, 담당자 박필영

3-4. 예방위주의 방재행정 구현

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제도 운영

개발 사업으로 인한 홍수나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해저감대책 등을 사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토목, 수자원, 도시계획, 환경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나. 재해대책 기금의 적립 및 운용

재해취약지구 사전정비와 대규모 재해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하여 매년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운용하고 있으며, 2012년까지 18,019백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였다.

다. 지진방재 종합대책 수립

'10. 1. 12. 아이티 수도 인근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7.3의 강진으로 300만명 이상이 피해를 입었으며, '11. 3. 11. 일본 도호쿠 지방 부근 해저에서 발생한 규모 8.9 강진에 따른 쓰나미로 인하여 2만 7천여명의 인명피해와 17조 400억엔의 재산피해를 입는 등 대규모 지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지진 발생 빈도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자연재해대책법에 지진 방재에 관한 규정을 두어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우리 도에서도 매년 지진방재 도상훈련과 규모 6.0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것을 가정한 모의훈련을 실시하는 등 지진재해 수습 체계 및 대응 능력을 향상시켰다.

라. 신속한 사전대비체계 구축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주민에게 실시간으로 재해상황을 전파하기 위한 자동우량경보시설, 재해 상황 문자전광판 등 22개 시군에 176백만원을 투입하여 재난 예·경보시설을 정비하였으며, 또한 198백만원을 투입 순천시 등 15개 시군의 노후 강우량기 22대를 교체하여 정확한 강우정보 확보를 통한 사전대비태세 강화 등 재난 예·경보시설 확충에 적극 노력하였다.

마. 광역지원시스템 구축 및 주민자율방재역량 강화

재난현장의 원활한 복구지원을 위해 도와 지역 군부대, 대한건설기계 협회에 이어 서울, 부산 등 15개 광역자치단체와 광주지방기상청 등 유관기관과 인력 및 응급복구장비 지원을 위한 협정을 체결하고 실시간 현장정보 확보를 위해 경남, 제주도 현지주민과의 민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신속한 대응태세 구축을 위한 광역지원 체계를 마련하였으며,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해안가.계곡 등 96개 지구를 선정지구 내 재해약자 대피를 현지 주민이 책임지는 E-30(30분 대피)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지역내 재해저감 시설에 대한 예찰과 응급복구 활동을 하게 되는 지역 자율방재단 구성 등 주민자율방재시스템을 강화하였다.

추진
부서

건설방재국 방재과장 오광록, 방재복구담당 김희원, 담당자 염승열

바. 재해 예방·복구기능 강화

(1) 추진성과

재해 발생 우려가 많았던 재해위험지구 195개소에 대한 연차별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1998년부터 2012년까지 98지구에 4,941억원을 투입하여 재해위험지구에서 해제하였으며, 나머지 97지구에 대하여는 2013년에는 25지구에 722억원을 투입하여 정비할 계획이며, 향후 3년간 3,459억원을 투입하여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표 2-350〉 재해위험지구 정비현황

(단위 : 억원)

총 개 소 수		2012까지 정비		2013 정비		2014이후 정비계획	
지구수	사업비	지구수	사업비	지구수	사업비	지구수	사업비
195	9,122	98	4,941	25	722	72	3,459

재해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하여 말뚝 및 포대류 등 수방자재 6종과 구호물자, 의약품 등 10종을 확보하여 시·군에 비축 중이며, 불도저 등 동원장비 2,277대를 지정, 관리함으로써 복구기능을 강화하였고,

재해발생으로 인한 이재민 발생시 이를 수용하기 위하여 학교, 교회 등 849개소를 이재민 수용시설로 지정하였다.

(2) 재해관련 시설에 대한 투자확대

국가관리 하천은 피해가 적은 반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하천은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홍수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미개수하천의 개수사업에 많은 재원을 투자해야 하며, 효율적인 개수를 위한 조사연구 사업에도 투자를 늘려서 재해예방복구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추진
부서

건설방재국 방재과장 오광록, 방재복구담당 김희원, 담당자 정인화

3-5. 풍수해 피해 및 복구

가. 자연재해피해 발생 현황

최근 10년간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피해는 43명(사망 39, 실종 4)이었으며, 재산피해는 14,347억원으로 공공시설피해 8,050억원, 사유시설피해 6,297억원 이었다.

〈표 2-351〉 최근 10년간 피해현황

구 분	피 해 액 (백만원)			인 명(명)		이재민 (명)	공공시설 (개소)
	계	사유재산	공공시설	사 망	실 종		
합 계	1,434,754	629,750	805,004	39.0	4.0	15,220	18,104
평 균	143,475	62,975	80,500	3.9	0.4	1,522	1,810
2002	426,370	67,592	358,778	13.0	3.0	2,104	3,977
2003	272,404	175,192	97,212	10.0	1.0	4,558	3,843
2004	159,289	18,370	140,919	4.0	0.0	2,583	1,994
2005	250,321	245,500	4,821	4.0	0.0	2,436	142

구 분	피 해 액 (백만원)			인 명(명)		이재민 (명)	공공시설 (개소)
	계	사유재산	공공시설	사 망	실 종		
2006	46,485	10,369	36,116	0.0	0.0	87	1,182
2007	73,442	57,221	16,221	3.0	0.0	243	2,264
2008	1,018	1,018	0	0.0	0.0	0	0
2009	54,026	12,072	41,954	3.0	0.0	1,638	1,514
2010	46,709	25,438	21,271	0.0	0.0	426	318
2011	104,690	16,979	87,711	2.0	0.0	1,145	2,870

나. 신속한 재해복구 추진

(1) 이재민 구호

지난 10년간 발생한 이재민에 대해서는 사전에 비축되어 있는 구호 물자를 동원하여 신속한 응급구호를 실시하였고, 기 지정된 공동 수용 시설이나 천막 등 임시 가건물에 질서 있게 수용하고, 취사도구와 유류 등을 지급하였다.

(2) 응급복구 실시

재해발생 시에는 이미 편성된 수방단 및 민방위대원들이 보관중인 수방자재와 지정된 장비를 동원 신속한 복구를 통해 주민생활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였으며, 특히 2011년 8월 태풍 무이파 피해 발생 시에는 복구인력과 복구 장비 최대 동원, 복구비 국고 지원 확대, 복구 단가 인상지원은 물론 재난지원금 선지급 등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조기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하였다.

(3) 항구적인 개선복구 추진

재해복구는 자주방재 정신에 입각한 자력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민.관.군의 협조로 복구조치하고 중앙지원에서 제외된 피해에 대하여도 소관부처, 지방자치단체 또는 복구 책임자가 자체복구계획을 수립하여 항구적인 개선복구 계획을 수립하였다.

〈표 2-352〉 최근 10년간 복구비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피해액	계	복 구 비 지 원					자력 복구
			중 앙		지방비	용 자	자부담	
			국 고	의연금				
합계	1,434,754	2,400,560	1,416,294	7,323	375,744	305,075	51,677	183,232
평균	143,475	240,056	141,629	732	37,574	30,507	5,167	18.323
2002	426,370	800,985	591,385	5,560	141,685	56,943	5,412	5,209
2003	272,404	352,544	228,731	1,733	51,255	64,613	6,212	21,758
2004	159,289	218,540	159,733	0	37,616	14,680	6,511	10,600
2005	250,321	331,277	104,204	30	27,375	166,530	33,138	657
2006	46,485	66,641	37,325	0	29,316	0	0	17,640
2007	73,442	146,646	107,481	0	36,452	2,309	404	22,731
2008	1,018	0	0	0	0	0	0	351
2009	54,026	88,234	50,931	0	37,303	0	0	37,606
2010	46,709	61,576	28,527	0	14,681		0	18,368
2011	104,690	217,835	107,977	0	61,546	0	0	48,312

다. 추진 성과

최근 10년간 호우, 폭풍, 해수범람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연평균 인명 피해 3.9명, 재산피해 1,434억원이 발생하였으며, 도·시·군 재해대책본부와 유관기관이 총체적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현장 중심의 예방행정에 주력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였다.



건설방재국 방재과장 오광록, 방재복구담당 김희원, 담당자 염승열, 조선희

3-6. 친환경적인 하천정비

하천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리하는 국가하천과 도지사가 관리하는 지방하천으로 구분되며 하천연장은 총 3,232.1km로 국가하천이 328.0km, 지방하천이 2,904.1km이다.

〈표 2-353〉 하 천 현 황

구 분	하천수 (개소)	연 장 (km)	요개수 (km)	2012까지 개수		장 래 (km)	관리주체
				km	%		
계	561	3,232.1	3,729.0	2,957.7	79.3	771.24	
국가하천	7	328.0	362.0	358.4	99.0	3.56	국토해양부
지방하천	554	2,904.1	3,367.0	2,599.3	77.2	767.68	전라남도

하천정비는 요개수연장 3,729.0km중 지금까지 2,957.7km를 정비하여 79.3%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국가하천은 요개수연장 362.0km중 358.4km(99.0%), 지방하천은 3,367.0km중 2,599.3km(77.2%)를 개수하였다.

하천개수는 자연친화적인 식생매트, 환경블록공법 등을 도입하여 친환경적으로 정비하고 천변호수생태공원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휴식·레저·생활체육 공간으로 활용토록하고, 수해 상습지역을 해소하여 하천변

의 농경지와 가옥의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갈수기 인근 농경지에 원활한 용수공급으로 가뭄해소와 주민 숙원사업 해결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추진
부서

건설방재국 방재과장 오광록, 하천담당 박철웅, 담당자 문인기

3-7. 『도민 안전점검청구제』 추진

가. 필요성 및 목적

도민이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불안전시설을 발견하고 안전점검을 청구하면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불안전 시설을 무상점검 한 후 보수방법 및 해소방안을 제공하는 등 찾아가는 재난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나. 신청방법 및 점검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건축물, 옹벽, 민간.공공시설 중 위험요인이 있는 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단 공사와 관련된 법적분쟁시설, 민원이 발생된 시설은 제외하며 신청방법은 읍.면.동에 비치된 신청양식 및 인터넷, 전화로 청구하면 해당 시.군에서 우리 도로 청구하게 된다.

도에서는 건축, 토목, 등 각 분야별 도 안전관리 자문단과 도 방재과에서 확보하고 있는 철근 탐지기 등 안전점검 장비 13종을 활용하여 점검한다.

다. 추진 실적

2007년 42건, 2008년 31건, 2009년 20건, 2010년 11건, 2011년 19건, 2012년 15건 등 총 138건의 무료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정도, 보수방법 등 해소방안을 제공하였고 또한 점검한 시설에 대하여는 해소 시까지 추적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건설방재국 방재과장 오광록, 재난안전담당 정종태, 담당자 임창환

3-8. 민방위경보시설 운영관리 고도화

민방위경보시설은 국가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경보전파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로써 도내에 95대의 경보단말이 설치되어 연중 24시간 민방위경보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역 4개 방송사와 경보방송연결장치가 구성되어 각종 재난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할 수 있도록 경보전달체계가 구축되어 있다.

〈표 2-354〉 민방위경보시설 현황

구분 \ 기관별	계	도	시·군	비고
합 계	104	1	103	
도 경보통제소	1	1	-	
순천분배소	1	-	1	순천시
지진해일경보통제대	3		3	여수시, 고흥·완도군
민방위경보 수신단말	85	-	85	22시·군
지진해일경보 수신단말	10	-	10	여수시, 고흥·완도군
경보방송연결장치	4	-	4	목포KBS·MBC 여수MBC, 순천KBS

가. 경보시설 활용 다각화

경보시설은 민방공사태 등 국가의 위급한 상황을 전달하는 데 역점을 두고 운영관리 되고 있으나, 최근에는 각종 재난사고에도 즉시 대응하는 생활 친화적 시설로 활용을 다각화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2012년도 주요 활용실적을 살펴보면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방송에 12회, 폭염피해 24회, 태풍피해 11회, 산불피해 23회 등 총 70회의 재난예방 방송을 실시하였다.



건설방재국 방재과장 오광록, 경보통제담당 김덕호, 담당자 오종희

나. 경보사각지역 해소 사업 추진

전국의 평균 경보사이렌 가청률은 약 80% 수준인데 비해 우리 도는 도서 및 산간지역이 넓게 분포되어 약 60% 수준이다. 이에 도내 주요 산업단지 및 인구밀집지역에 경보시설을 확충하여 가청권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경보사각지역 해소사업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6개 지역에 사업비 240백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시설을 완료했다.

〈표 2-355〉 민방위경보사각지역 해소사업 추진현황

연도별	시설대수	설치장소	예산액 (백만원)	비고
합 계	6		240	
2010	2	목포시 연산동 광양시 광양읍	80	완료
2011	2	영암군 삼호읍 장성군 삼계면	80	"
2012	2	담양군 담양읍 보성군 득량면	80	"

이러한 시설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내 가청률이 전국 대비 20% 정도 낮아 2013년도에는 신도시 개발, 아파트 단지 등의 지형지물 변화 지점을 포함하여 도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가청률 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점진적으로 경보사각지역에 경보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추진
부서

건설방재국 방재과장 오광록, 경보통제담당 김덕호, 담당자 신태권

4. 지역민과 함께하는 열린 토지행정 구현

4-1.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열람 제공

지가공시제도는 토지의 공적인 가격을 조사 공시함으로써 각종 토지 정책에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거래 시 건전한 가격 형성의 기초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토지에 관한 과세 및 부담금 부과 등에 폭넓게 활용하고 있다.

과거의 지가체계는 국토교통부(구 건설부)의 기준지가, 안전행정부(구 내무부)의 과세시가 표준액, 국세청의 기준시가, 기획재정부(구 재무부)의 감정시가 등 소관주체별로 각기 다른 기준에 의해 평가하는 다원화된 지가체계였다.

이와 같이 각각 다른 기준에 의하여 조사·평가됨에 따라 조사 인력 및 재정의 낭비는 물론, 상호 연계성 결여로 인한 혼란과 불신이 초래되는 문제가 있어 공적 지가에 대한 비효율성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다원화된 공적지가를 공시지가로 일원화하기 위해 1989년 4월 1일「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같은 해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필지별로 토지특성을 조사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적정한 가격을 산정하게 된다. 이렇게 산정된 지가는 토지소유자의 의견 수렴과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시·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총 417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하였다. 이는 비과세 토지 및 공공용지를 제외한 도 전체토지의 74%에 해당한다.

인접 시군간 개별공시지가 불균형으로 인한 과세형평의 논란이 대두되고 민원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군간 연석회를 개최하여 균형을 유지하고,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담당공무원 워크숍 개최, 토지특성 사전 열람제 운영, 도로 등 공공용토지 개별지가 산정 등 전라남도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시책을 다양하게 발굴하여 시행하였다.

특히 실거래가 상승 또는 하락으로 현실과 맞지 않는 지가는 현실화를 추진함으로써 합리적인 지가조사에 만전을 다하였다.

조사된 개별공시지가는 전라남도 홈페이지 또는 시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상시 열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건설방재국 토지관리과장 민상기, 토지관리담당 운영진, 담당자 김승채

4-2.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관리

기업도시, 특성화산단 등 대규모 국·도정 사업에 따른 부동산 투기를 사전 예방하고 실수요자 위주의 토지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투기우려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다.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를 거래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토지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심사시 토지의 개발·이용계획의 적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실수요자 거래인 경우에는 신속하게 허가처리 하되 투기성 거래에 대해서는 불허가 처분 조치하여 부동산 투기를 예방하는 한편 토지의 위장 증여·전매와 같은 불법적 거래를 금지하는 등 토지거래 허가제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있다.

또한 전남경제 활성화에 부응코자 토지시장 상황에 따라 허가구역을 해제(또는 축소) 하는 등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일정규모 미만의

소규모 토지거래는 허가절차 없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실수요자 위주의 토지거래 활성화와 건전한 토지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있다.

전라남도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2012년말 8개 시군, 11개 지역, 48.25km²(도 면적의 0.39%)를 지정관리하고 있다. 참고로 국토교통부 지정 허가구역은 2008.1월 20,060.6km²(전 국토의 20%)의 약 1/20 수준인 2012년말 1,098.7km²(전 국토의 1.1%)로 대폭 감소한 상황이다.

〈표 2-356〉 토지거래 허가대상 면적

지 역		허가대상 면적(m ²)
도시지역	주거지역	180m ² 를 초과하는 토지
	상업지역	200m ² 를 초과하는 토지
	녹지지역	100m ² 를 초과하는 토지
	공업지역	660m ² 를 초과하는 토지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90m ² 를 초과하는 토지
도시지역외의 지역	농 지	500m ² 를 초과하는 토지
	임 야	1,000m ² 를 초과하는 토지
	농지 및 임야이외의 토지	250m ² 를 초과하는 토지

〈표 2-357〉 전라남도 토지거래 허가구역 현황

(2012. 12. 31. 현재)

지 역		면적(km ²)	지 정 기 간	지 정 사 유	비 고(지정자)
합 계		48.25	도 전체면적(12,246)의 0.39%	8개 시군, 11개 지역	
목포시	서산동, 온금동, 금화동, 유달동 일원	0.4	'09.12.03~'14.12.02(5년)	목포 서산, 온금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도지사
순천시	해룡면 성산·선월·신성·호두리 중 경제자유구역안의 지역	0.65	'11.4.1~'14.3.31(3년)	경제자유구역 해룡산단조성	광양경제청장

〈표 2-358〉 전라남도 토지거래 허가구역 현황

지역		면적 (km ²)	지정기간	지정사유	비고 (지정자)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 광양읍 세풍리	10.48	'11.9.5~ '14.9.4(3년)	광양만권 신대·덕례배 후단지	광양경 제청장
광양시	광양시 성황동, 황금동 일원	1.4	'11.9.5~ '14.9.4(3년)	성황배 후단지(1.02) 황금산단(0.38)	광양경 제청장
광양시	광양읍 용강리 일원	1.9	'11.7.6~ '14.7.5(3년)	용강배 후단지 예정지역	광양경 제청장
곡성군	곡성읍 신기·학정·장선·읍내리 (4개리)	1.64	'11.11.10~ '13.1.9(1년 2개월)	곡성일반산업 단지 조성	도지사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1개리)	1.98	'10.6.18~ '12.6.17(2년)	고흥조선타운 개발	도지사
고흥군	영남면 남열리 (1개리)	1.15	'10.6.18~ '12.6.17(2년)	남열리조트 개발	도지사
보성군	별교읍 마동리 (1개리)	1.95	'11.11.10~ '14.11.10(3년)	보성일반산업 단지 조성	도지사
함평군	월야면 영월·외치·월야리 (3개리)	3.6	'11.6.18~ '13.6.17(2년)	국가산업 단지 조성	도지사
신안군	압해면(6개리)가룡·복룡·신장·장감리 전부와 학교·신용리 일부	23.1	'08.10.27~ '13.10.26(5년)	신안조선타운 건설 등	도지사



건설방재국 토지관리과장 민상기, 토지관리 담당 윤영진, 담당자 박성열

4-3. 부동산개발업 등록 관리

부동산개발업이란 토지를 택지·공장용지·상업용지 등으로 조성하거나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여 해당 부동산을 일반에게 판매·임대 등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업종이다.

그동안 건설업자,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등록제만 있었을 뿐, 부동산개발로 인한 관리제도가 없음으로 인해 영세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개발업자가 난립하여 무질서한 부동산시장이 형성되어 왔다.

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은 물론 건전한 부동산시장의 육성 및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7년 11월 18일부터 시행되었다.

〈표 2-359〉 등록대상 규모

건축물(연면적)	주상복합(비주거용 연면적)	토지(면적)
연면적2천㎡ (연간5천㎡)이상	2천㎡(연간 5천㎡)이상이고, 비주거용 비율이 30%이상인 경우	3천㎡(연간1만㎡) 이상

〈표 2-360〉 등록요건

구 분		등 록 요 건
자본금	법인	자본금 3억원 이상
	개인	영업용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부동산개발전문인력		상근 2명 이상
시 설		실제 사무실 용도로 적합하면 가능

부동산개발업 등록절차는 등록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전라남도 토지관리과에 제출하면 임원에 대한 신원조회와 사무실 적격여부 확인을 거쳐 30일 이내에 등록증을 교부한다.

도내에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체를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 기재사항 변경신청, 사업실적 신고를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http://klis.jeonnam.go.kr/>)

〈표 2-361〉 전라남도 부동산개발업 등록 현황

(2012. 12월말 현재)

구 분	합 계	신규	폐업, 이전, 취소	비 고
업체수	30	53	23	



건설방재국 토지관리과장 민상기, 토지관리담당 운영진, 담당자 박성열

4-4. 정확한 토지등록 관리

도내 모든 토지마다 그 위치·형태·종류 및 소유권을 비롯한 물건(物權)이 미치는 한계를 밝혀 공시(公示)함으로써 도민의 소유권 보호 및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모든 토지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일필지마다 지번을 붙이고, 그 지목·경계·면적을 정하며, 기타 법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함께 지적공부에 등록하고 있다.

토지의 정확한 등록을 위해서 도내에 설치한 지적측량기준점 74,298 점을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2012년도에는 7,659점을 신설하였으나, 이중 5,000점을 도내 마을단위마다 1내지 2점을 설치함으로써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다.

이와 관련 택지개발, 경지정리, 산단조성 등의 토지개발사업이 완료된 66개 지구 2,953ha의 지적확정측량을 정확히 검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토록 하였으며, 종전에는 토지의 경계를 수작업에 의하여 등록공시 하였으나 현재는 수치화된 경계를 좌표에 의거 등록하고 있다.

또한 도민들로부터 신청된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330천필지를 정확

히 등록함과 아울러 등기까지 대신 처리해 줌으로써 도민들의 재산관리 편의를 폭넓게 제공하였다.

추진
부서

건설방재국 토지관리과장 민상기, 지적담당 박종석, 담당자 김옥남

4-5. 지적재조사 사업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아울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기 위하여 2011년 9월 16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2012년 3월 17일 부터 2030년까지 19년간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다.

지적정보는 토지의 위치, 형태, 이용, 지번, 경계, 면적, 사용목적, 건축물 등 땅의 모든 정보를 기록해 놓은 “땅의 주민등록”이라 할 수 있으며, 국토를 효율적으로 개발 활용하고, 토지거래의 기준이 되며, 토지에 부과하는 세금의 기준이 되는 등 국민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기초 자료이다.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지적도의 문제점은 100여 년 전 낙후된 기술로 조사·측량된 지적정보가 부정확할 뿐만 아니라, 종이 지적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훼손·변형·마모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음으로 대한민국 전국토의 15%가량이(전남도 14%)지적도와 불일치 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토지 분쟁에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이 연간 3,800억원, 잘못된 토지 경계로 인한 이웃간의 분쟁으로 사회적 갈등이 발생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위치도 일본 측량원점인 동경 원점을 사용해 세계 표준원점과 약 365m나 차이가 나 디지털지적으로 정확하게 등록하여 세계표

준원점에 맞춰야 한다.

디지털 시대에 맞는 정확한 지적도 구축을 위하여 가로·세로·높이 1mm단위까지 정밀하게 측량하는 우리의 첨단 기술로 토지를 정밀하게 측정하고 오차 없는 디지털 지적도를 구현하기 위하여, 전 국토를 새롭게 측량하여 정확한 지적정보를 기반으로 IT기술과 접목하고, 3D입체 지적정보 제공으로 한국형 스마트지적을 완성함으로써 스마트 국토시대를 개척하는 국가사업이다.

우리 도에서는 2030년도 까지 지적불부합지 821천필지에 대하여 국비 1천8백억원을 들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2012년도에 광양시,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5개 시군에서 국비 3억원을 지원받아 경계조정을 추진중이다.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되면 불규칙한 토지 모양을 정형화하고, 필지 단위의 지표·지상·지하정보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토지이용이 편리해질 뿐 아니라, 맹지는 토지소유자간 경계조정을 통해 도로를 확보하여 건물 신·증축을 할 수 있어 토지활용도 증가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뿐 아니라, 첨단 기술로 제작된 지적정보를 토대로 다른 공간정보와 융합 활용이 가능해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추진
부서

건설방재국 토지관리과장 민상기, 지적담당 박종석, 담당자 박원선

4-6. 국토종합정보센터 운영

토지관련 정보의 공동 활용으로 국토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토지정보 수요기관의 각종 토지정책 수립과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적, 주민자료, 공시지가자료 등을 연계 통합하여 적기에 제공하고 주민편의 위주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토정보센터는 1994년 당시 행정자치부에 중앙서버가 설치 운영되었 으며 도는 1996년 조상땅 찾아주기 민원서비스를 시작으로 좀 더 빠르고 쉬운 서비스 창출요구에 맞추어 2001년 11월 시.군까지 온라인을 개통하였다.

도내 토지정보 12,270km² 5,679천 필지에 대한 정보를 완벽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지난 한 해 동안 각종 토지개발사업으로 인한 토지이동(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목변경)이 발생된 토지변동과 소유권이전, 보존등기 등으로 발생한 소유권변동 등 총 401천여 필지의 변동 자료를 실시간으로 정리하여 최신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2012년 한해 공직자 재산등록의무자 23,315명에 대한 토지정보를 검색하여 30,700필지를 제공함은 물론, 생계유지 사유로 인한 병역감면 대상자, 각종 세금 체납자, 벌금·과징금 부과자 등 개인이나 법인의 재산 소유현황 자료 187,667명의 자료를 검색하여 301,648필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또한,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자 조상 땅을 찾아주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335명이 신청하고 4,619필지의 땅을 찾아 줌으로써 소유권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2002년 2월 1일부터는 시.군에서도 조상 땅 찾아주기를 할 수 있도록 온라인을 확대 운영함으로써 주민들이 가까운 시.군에서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였다.



건설방재국 토지관리과장 민상기, 지적담당 박종석, 담당자 김창일

4-7. 측량업 등록 관리

측량업이라 함은 기본측량, 공공측량 또는 일반측량의 용역을 도급 받는 영업을 말하며, 이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측량·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종류별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계 측량업등록을 하여야 한다.

2004년 7월 21일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11개 측량업종 중 측지측량업, 연안조사측량업, 항공촬영업, 공간영상도화업, 영상처리업, 수치지도제작업, 지도제작업, 지하시설물측량업은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등록업무를 담당하고, 지적측량업, 공공측량업 및 일반측량업은 시.도에서 이를 담당하고 있다.

공공측량업의 업무의 범위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이 각종 건설공사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계획, 조사, 설계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공공측량과 일반측량으로서 토지에 대한 측량과 설계에 수반되는 조사측량, 측량관련도면의 작성 등을 위해 실시하는 측량을 말하며, 일반측량의 범위는 공공측량의 설계금액이 3천만원이하의 공사와 일반측량으로서 토지에 대한 측량을 말한다. 전남도내 측량업등록은 총 149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다.

〈표 2-362〉 전라남도 측량업 등록 현황

구분	합 계	공공측량업	일반측량업	지적측량업	비 고
업체수	149	45	94	10	

측량업의 등록절차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접수하면 측량기술자의 이중등록여부, 장비 및 기술능력의 등록기준 적합여부, 사무소 위치 유무, 대표자 및 임원의 신원조회 등을 실시하여 관계법령에 위법성이 없을 경우에는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규등록이 가능하다.



건설방재국 토지관리과장 민상기, 지적담당 박종석, 담당자 김영신

4-8. 한국토지정보시스템 활용을 통한 서비스 강화

토지행정의 효율화 및 합리적인 토지정책수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축된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을 이용하여 우리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토지정보를 전국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안방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요 서비스 내용으로는 토지이용계획, 지적(임야)도, 개별공시지가 열람/결정지가, 개별주택가격, 경계점좌표, 지적측량기준점, 부동산중개업 정보 등 14종의 단위업무 토지정보를 안방에서도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2012년도 한국토지정보시스템 민원서비스 이용실적 분석결과 토지이용계획 열람/발급 2,118천건, 개별공시지가 428천건으로 제일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 토지이용에 따른 토지정보서비스가 활성화 되어 있고 갈수록 이용자가 증가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위치를 기반으로 하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은 양질의 토지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임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는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기반 시스템과 연계한 온나라 부동산 포털을 이용하여 개별필지의 공시가격, 아파트 실거래가 등 가격정보와 용도지역지구 등 토지이용규제정보,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 등의 각종 토지와 관련되는 공간정보를 열람 제공하고 있다.

추진
부서

건설방재국 토지관리과장 민상기, 공간정보담당 박병춘, 담당자 김영국

4-9. 도로명주소 사업

가. 정의 및 도입배경

도로명주소란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도로에는 도로명을, 건물에는 건물번호를 부여하여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구성된 주소체계를 말한다.

현행 주소체계는 1918년 일제강점기에 도입하여 약100년간 주소로 사용해 왔으나, 산업화 사회를 거치면서 잦은 분할·합병 등으로 지번의 순차성이 훼손되어 주소로 집을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우편배달, 방문 등 도민생활에 큰 불편을 끼쳤고, 범죄·화재 등 재난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이 따랐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부분의 선진국(OECD 34개국 중 32개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도로명주소 사업을 착수하였다.

나. 추진과정

도로명주소 사업은 2001년도에 목포·광양시를 시범지역으로 시작하여 2007년도에는 전 시·군이 추진하게 되었다.

우리 도는 도로구간 13천개소에 대해 도로명판 23천개, 건물번호판 513천개의 시설물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2010년 하반기에는 예비안내를 실시하여 도로명주소에 대한 불만·불편사항 등을 접수하여 처리 완료 하였다.

2011년 3월 24일부터 6월 30일까지 도로명주소에 대하여 방문고지, 서면고지, 공시송달 절차를 마무리하고 7월 29일자로 전국 동시 고시를 마침에 따라 도로명주소가 법적주소가 되었다.

2011년 하반기에는 각종 계약이나 거래 등 법률관계 설정에서 지장을 주지 않도록 주민등록이나 인감 등 1,095종에 이르는 방대한 공적장부의 표기를 도로명주소로 전환을 완료하였다.

다. 현재 추진 사항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사용에 대비하여 도민의 주소생활에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간부문에 대한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초등학교 3,4학년 지역사회교과서에 도로명주소 사용 생활화 내용을 신는 한편, 도내 전 세대를 대상으로 방문 또는 우편홍보물을 발송하여 도로명주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특히 시각장애인 및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소수자가 소외받지 않도록 홍보의 영역을 확대하여 점자형 및 외국어 표기 도로명안내도를 제작·배부함으로써 도민 모두가 도로명주소의 편리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라. 문제점 및 해결방안

약 100년간 지번주소체계를 사용한 도민의 입장에서 새로운 주소체계인 도로명주소는 낯설고 생소하여 생활 속에 녹아드는 과정에서 상당한 혼란과 불편이 예상된다. 신용카드, 통신, 우편 등 주소사용이 빈번한 민간분야와의 연대를 강화하여, 민간부문의 도로명주소 저변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도민 불편을 최소화 할 것이다.

마. 기대효과

새로운 주소체계로 전환 과정에서 많은 혼란과 진통이 따르겠지만, 도로명주소가 정착되면 위치탐색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절약될 뿐만

아니라 재난재해, 구조구급 등 각종 응급서비스가 대폭 향상되고 물류 비용 절감과 위치정보서비스가 획기적으로 발전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도로명주소 사업은 단순히 지번주소의 문제점 해결에 그치지 않고 과학적인 위치정보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주민 생활에 혁신적인 편의를 제공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다.

추진
부서

건설방재국 토지관리과장 민상기, 공간정보담당 박병춘, 담당자 심재홍

4-10. 공간정보화 사업

공간정보는 현실 실제사물 위치정보에 속성정보를 덧입힌 새로운 가치정보를 스마트폰 등 첨단기술매체를 통해 보게하는 것으로 실생활 속에 또다른 새로운 가상세계를 창조하는데 의의가 있으며

공간정보화 사업은 지상.지하.수상.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모든 자연적, 인공적 객체에 대한 위치와 속성정보들을 컴퓨터와 같은 정보매체를 통해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들을 수요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도민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각종 도정시책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공간정보에 대한 지금까지 주요 추진사항을 보면 2004년 5월 18일 GIS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지리정보담당을 설치하고 2005년 12월 “전라남도 지리정보체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매년 중앙부처와 타 시도 및 국토지리정보원 등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2007년에는 국토해양부와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 사업 협약을 체결하는 등 신규 사업 발굴에 노력해왔다. 또한 도내 공간정보화사업에 활로를 모색하기 위하여 첨단 공간정보기술에 관한 학술 발표와 정보교류를 지속하고 있으며 공간정보체계 공동협의회를 운영함으로써 각 대학의 관련학과 교수 및 중앙

부처, 유관기관 전문가 등의 조언과 자문을 통해 보다 완벽한 공간정보 사업 추진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도에서는 다양한 공간정보시스템들을 구축해왔는데 F1국제자동차경주 대회, 여수세계박람회,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등 각종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 및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과 대불산단, 그리고 서남해안 일대가 투자의 적지로 떠오르는 등 전남의 성장잠재력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활발한 지역개발 사업추진을 위해 위성영상공간정보시스템 구축(2004년 ~ 2006년) 완료하여 효율적인 행정업무 추진기반을 마련하였으며 2010년 12월에는 전국 최초로 섬 관리시스템을 추가로 개발 구축하고 통합위성영상 공간정보시스템으로 확대 개편하여 우리 도내 섬들의 관광자원화와 휴양레저 투자유치 등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행정내부뿐만 아니라 남도의 관광명소, 여행지 등 위성영상 위치정보를 바탕으로 현장감 있게 전국에 알리고 여행 방문객들이 서로 여행 후기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양방향 소통 방식의 위성영상 참여마당 시스템(2006년)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 특히 2009년에는 전국 최초로 우리 도가 자체 개발한 투자유치지원시스템을 선보였으며, 2010년에는 투자정보브리핑시스템을 추가 개발하고 2011년 ~ 2012년에는 고도화 구축을 통해 한층 더 기능을 강화하여 투자유치 활동 및 지역개발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투자유치지원 시스템은 투자적지에 대한 각종 고시사항, 환경규제 사항, 토지현황, SOC인접성 및 입지정보, 건물 및 시설물정보, 도시계획 등 관련 시스템들과 연계하여 종합 입지분석 정보를 제공하며 평면상의 현황정보 이외에도 고해상도 항공영상을 활용한 3차원의 분석 기능을 통해 보다 더 구체적이며 현실감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모든 공간정보들을 통합 연계한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시스템과 연동되어 각종 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발전이 될 전망이다.

이러한 자체구축 공간정보시스템 이외에도 중앙과 연계하여 인터넷

토지민원 조회발급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2006년), 모든 공간정보를 한데 모아 쉽게 활용하기 위한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2010년),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개발계획상 입지를 분석검증하기 위한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2009년) 등을 연계 운영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GIS를 기반으로 구축한 각종 시스템은 대규모 개발 입후보지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등 효과적인 정책자료로 활용 가능하고, 간척지 또는 해변가의 미등록 토지를 발굴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으며, 관광지 접근경로의 3차원 입체검색과 기타 도로, 산림, 재난재해 위기관리 등에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획기적이고 다양한 분야로 발전이 가능하다. 특히 지리적으로 수도권과 먼 거리에 있는 전남지역에서는 물류비용을 크게 절감시키는 데에도 커다란 효과가 기대된다.

공간정보 활용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도시, 농업, 산림, 해양, 환경 등 여러 분야의 흩어진 공간정보를 한데 모아 누구나 찾기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조성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 각 시·군별로 공간정보통합시스템이 구축하여 행정정보와 공간정보의 융·복합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하여 구축되는 대량의 자료, 공간 빅데이터는 기존의 분석도구나 분류체계로 관리될 수 없고 공간정보 분석기법 통해 특정 공간위치상 사람들의 평균 소득수준, 수돗물이나 전기사용량, 소비성향 등을 토대로 유망한 창업업종, 필요한 생활서비스와 같은 새로운 가치있는 정보를 창출해 내게 될 것이다.

다만 현재까지는 중앙부처 주도로 추진되어 있어 지역내 공간정보 업체의 참여가 제한되고 지역 지원사업 또한 매우 부족하여 우리 도내 천일염, 해조류, 친환경 농업재배 분포도와 같은 지역특색을 살린 특화된 공간정보 구축에 어려움이 있으며 무엇보다도 공간정보 융·복합을 통한 새로운 가치정보 창조를 위해서는 각 기관들의 공공정보의 개방이 더딘 부분은 개선해야 될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 공간정보산업은 2012년 세계 최초로 국가통계 산업분류에

서 에너지, 로봇, 스포츠, 콘텐츠 등과 같이 국가경쟁력 제고와 관심을 위한 특수산업으로 등록되었으며, 2012년 국내 시장규모는 4.8조원 수준이나 2016년에는 15조원으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이를 위해 새정부에서는 2017년까지 2천억원 직접투자를 통해 1.2만명의 고용창출(총 1조원 직·간접 투자 통해 4.6만명 고용창출)할 계획으로 앞으로 미래 블루오션 산업으로 자리매김이 예상되고 있으며 이에 꾸준한 관심과 실생활에서 활용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건설방재국 토지관리과장 민상기, 공간정보담당 박병춘, 담당자 박현섭

4-11.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정부에서는 1994년 12월과 1995년 4월 연이어 발생한 가스폭발사고를 계기로 도로와 지하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7대 지하시설물(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난방, 송유)에 대한 위치정보를 공간정보 DB화하여 통합 관리하기로 하고 우선 도시계획 지역에 있는 지하시설물을 대상으로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우리 도에서는 1997년 여수시를 시범지역으로 시작하여 2012년까지 334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8개 시군의 도로와 상·하수도 시설물 7,988km를 현장 조사·탐사하여 위치 및 속성 정보를 전산화 하였고, 앞으로 담양군 등 14개 군 지역까지 사업을 확산하여 2015년까지 170억원을 투입 3,957km의 지하시설물을 전산화 할 계획이다.

사업 완료로 도로상의 시설물과 상·하수도 등 7대 지하시설물에 대한 위치 및 관련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하 매설물 설치시 가스관 폭발과 같은 대형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재해발생시

주변지역의 상수도·하수도·통신·전기·가스·난방·송유의 위험시설물의 현황을 즉시 파악하여 조치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자료를 공동 활용함에 따라 중복투자를 방지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거나 열악한 지자체의 예산부족과 중앙부처의 예산확보 부족 등으로 전 시·군의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은 장기간 소요될 전망이다.

추진
부서

건설방재국 토지관리과장 민상기, 공간정보담당 박병춘, 담당자 김수복

5. 영산강 살리기 추진

5-1. 기본현황

한반도 남서부 전라남.북도에 위치(동경 126°26'12"~127°06'07", 북위 34°40'16"~35°29'01")한 영산강은 담양군 용면의 추월산 자락인 가막골 “용소”에서 발원하여 드넓은 호남평야와 나주평야를 유장하게 흘러 영산강 하구둑을 통해 남해로 유입된다.

영산강 유역의 평균경사는 19.5%로서 비교적 완만하고, 하천에 인접하여 농경지가 발달해 있으며, 영산강의 중상류부에는 광주광역시와 나주시 등의 도심지 및 인구밀집 지역이 위치하고 있고, 전체 유역면적 3,455km²중 임야와 농경지가 각각 1,749km²와 1,161km²로 전체 유역면적의 85%, 도시지역이 242km²로 7%를 차지하고 있다.

영산강 유역의 행정구역은 전라북도 정읍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나주시, 목포시, 담양군, 장성군, 영광군, 화순군, 함평군, 무안군, 영암군 등 1개 광역시, 2개도, 3개시, 7개군의 전체 또는 일부를 포함하고 있으며, 유역내 인구는 총 2,308,947명으로 남자가 1,148,501명, 여자가 1,160,446명으로 여자가 11,945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914,998가구(가구당 약 2.3명)가 거주하고 있다.

〈표 2-363〉 영산강 주요현황

하 천	하천등급	유역면적 A(km ²)	유로연장 L(km)	하천연장 (km)	유역평균폭 A/L(km)	형상계수 A/L ²
영 산 강	국가	3,455	129.5	111.7	26.7	0.206

※ 자료 : 영산강 하천기본계획 보고서(2009, 익산지방국토관리청)

5-2. 사업개요

옛 청동기 시대에서부터 2000여년이 넘는 동안 남도민의 삶의 터전이자 역사·문화의 산증인이며, 지역경제를 이끌었던 영산강이 그 동안 침전물과 각종 폐수 등으로 수질이 심하게 오염(BOD 평균 3~5급수)되었고,

하천바닥에 높게 쌓인 퇴적토 등으로 하천이 범람하여 매년 크고 작은 인명과 재산피해의 수해가 발생하였다.

〈표 2-364〉 영산강유역 풍수해현황(1998~2007)

구 분	사망 (인)	이재민 (인)	침수면적 (정보)	피해액 (억원)
영산강 유역	18	8,903	26,550	5,042

※ 자료 : 영산강 하천기본계획 보고서(2009,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이에 오염된 영산강의 수질을 개선하고 물길을 정비하여 홍수 등으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2004년부터 영산강 살리기가 본격 추진하게 되었다.

5-3. 추진성과

2004년 영산강 살리기 구상에 이어 2006년 6월에는 “영산강 프로젝트 TF팀”이 구성되었고 같은 해 7월 광주광역시와 공동으로 「광주·전남 영산강 수질개선 공동 노력 합의문」을 발표하게 되었다.

2007년부터 “영산강 프로젝트 기본구상안” 검토에 착수하여 같은 해 12월에 재해예방 및 수질개선 사업 외에 친수공간 조성, 역사·문화 복원 등을 포함한 영산강 살리기 종합계획을 마련하였다.

2008년 1월 영산강 살리기 구상계획을 발표하고 정부에 영산강 살리기 사업 조기 추진을 건의하는 등 영산강 살리기 사업계획을 정부계획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하였다.

2008년 12월 정부에서 녹색뉴딜사업의 일환으로 4대상 살리기 사업을 발표함에 따라 이에 발맞추어 4급을 단장으로 한 총 9명의 인원으로 영산강사업지원단을 발족(2009.2)함으로써, 영산강 살리기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2009년 3월 영산강을 살리기 위한 사업으로 총 32개 사업에 9조 1,212억원을 정부에 건의하는 등 영산강을 살리기 위한 국비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함으로써 약 2조 7천억원의 사업비(본사업비)를 확보하였다.

〈표 2-365〉 영산강 살리기 사업내역(본사업)

사업내용		사업량	사업비	비고
합 계(억원)		-	26,461	
국토부	소 계		13,583	
	하도정비(준설)	0.3억 m ³	2,184	
	보	2개소	1,835	
	생태하천 조성	130km	2,792	
	제방보강	4개소, 17km	1,038	
	강변저류지	1개소	574	
	홍수조절지	2개소	2,785	
	자전거 도로	220km	209	
	기 타	-	2,166	
농림부	소 계		13,866	
	농업용 저수지	23개소	6,206	
	영산강 하구둑	1식	6,189	
환경부	수질대책	24개소	483	

이는 유역면적당(km²) 사업비로는 4대강 중에서 제일 큰 규모이며, 하천연장당(km) 사업비로도 낙동강과 더불어 가장 높은 수준이다.

〈표 2-366〉 4대강 사업비 비교

구 분	한 강	금 강	낙동강	영산강
A. 사업비(억원)	20,435	24,875	97,875	26,461
B. 유역면적(km ²)	25,954	9,912	23,384	3,468
구 분	한 강	금 강	낙동강	영산강
C. 하천연장(km)	494	395	506	138
유역면적당 사업비(A/B)	0.79	2.51	4.19	7.63
하천연장당 사업비(A/C)	41.4	63.0	193.4	191.7

정부의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발표('09.6.8)이후 세부사업내용 확정, 환경영향평가 등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 준비절차를 거쳐 2009년말부터 영산강 살리기 사업이 본격 착공되었다.

사업착공이후 유관기관간 상호협력과 지역 주민들의 협조로 국토해양부에서 시행하는 하천정비사업이 원만히 추진되어 2012년 6월 공사가 완공됨으로써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新영산강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는 1977년 영산포에서 마지막 배가 목포로 출발한 이후 명맥이 끊겼던 영산강 뱃길을 34년 만에 복원하는 쾌거이며, 우여곡절 끝에 2011년 12월 사업비를 확보하여 2013년에 완공되는 영암호 통선문과 더불어 사통팔달의 교통요충지로서 새 물결 시대를 주도하게 될 것이다.

전라남도는 영산강 살리기 사업의 완공으로 新영산강시대를 알리기 위해 언론매체 등을 활용한 다양한 홍보(언론 인터뷰, 대담, 기자회견,

보도자료 배포, 홍보물 제작.배포 등)와 아울러 지역주민.민간단체.학생 등 각계 각층이 참여하는 현장체험 행사(영산강 뱃길탐사, 강살리기 순회 사진전 등) 등을 통하여 영산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도민 이해도 제고와 공감대 형성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다.

5-4. 앞으로 계획

‘영산강 살리기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공됨에 따라 유관기관간 상호 긴밀히 협력하고, 사업성과를 활용한 다각적인 홍보와 주민 참여기회 제공 등을 통해 도민 공감대와 지지기반 확대에도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홍수방어와 수량확보, 수질.생태복원, 친수공간으로 조성된 영산강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함께 지역의 역사.문화.관광 자원 등과 연계한 영산강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지혜를 모아 나갈 계획이다.



추진
부서

건설방재국 방재과장 오광록, 영산강사업지원담당 이화중, 담당자 윤근상

6. 빛가람 혁신도시 건설

6-1. 빛가람 혁신도시 기본구상

가.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7년~2014년
- 위 치 : 전남 나주시 금천면.산포면 지역 일원
- 면 적 : 7,327천㎡(2만가구의 자족형 독립 신도시)
- 사 업 비 : 1조 4,175억원(조성비 9,676 보상비 4,499)
- 이전기관 : 한국전력 등 16개 기관(해양경찰학교 여수시 개별이전)
- 사업시행 : 공영개발(LH공사, 광주도시공사, 전남개발공사)

나. 배경 및 목적

국토 공간의 재편성으로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방도시에 활력 부여를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전국에 10개의 혁신도시를 건설하여 수도권 소재 147개 공공기관을 분산배치하게 되었다.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한 15개 공공기관이 이전하게 되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빛가람’은 지역의 특성과 이전기관의 특수성이 조화된 개성 있는 성장거점 도시로 기본구상 되었다.

다. 빛가람 혁신도시 미래상

“빛과 물이 하나 되는 상생의 녹색 생명도시 Green-Energypia”

이전공공기관과 지역전략산업의 연계로 지역발전 성장 동력을 창출하

고 산·학·연·관 연계를 통해 혁신을 창출하는 거점도시를 건설할 계획이다.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는 지속가능한 도시공간구조와 교통체계 구축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친환경 전원도시를 건설하고

미래형 선진학교 설립 등 우수한 교육환경 조성과 문화적 개방성을 통해 학습과 창의적 교류가 가능한 교육·문화도시를 지향한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 단장 설동진, 이전지원팀장 정기복, 담당자 양완길

6-2. 빛가람 혁신도시 건설 추진상황

가. 사업추진 내용

참여정부의 최대 국책사업 중 하나인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건설은 입지선정에서 보상까지 숱한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2007년 11월 나주시 금천면 일원 혁신도시 조성 현장에서 첫 삽을 뜨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개발사업 조성공사는 총 7,327천㎡를 9개 공구로 나누어 LH공사(43%), 광주도시공사(24%), 전남개발공사(33%)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두개(광주광역시, 전라남도)의 광역자치단체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는 상생발전의 역사적 기틀을 만들었으며 양 지역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육성해 나갈 것이다.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건설의 목표는 15개 이전공공기관과 산·학·연·관이 서로 협력하여 최적의 혁신도시 여건과 수준 높은 생활환경을 갖춘 새로운 차원의 미래형도시를 건설하는데 있으며 두 광역단체의 상생발전과 협력의 정신이 깃들어 있다.

나.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상황

공공기관선진화 추진계획에 따라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문화콘텐츠진흥원, 방송영상산업진흥원, 게임산업진흥원, 문화콘텐츠센터, 디지털콘텐츠사업단 5개 기관을 통합하여 서울에 잔류할 계획이었다.

또한 정보보호진흥원, 인터넷진흥원, 국제통신협력진흥원 3개 기관이 통합된 한국 인터넷진흥원은 당초 충북 진천으로 이전할 계획이었으나, 중앙정부와 국회 등을 방문하여 2개 기관이 전남으로 입지가 결정되도록 적극적인 유치전에 나선 결과 2개 기관을 포함한 16개 공공기관의 전남 이전이 확정되어 2010년 5월 24일 이전계획을 최종 승인받아 15개 기관은 나주 혁신도시로, 해양경찰학교는 여수시로 개별 이전하게 되었다.

〈표 2-367〉 이전공공기관 부지매입 및 청사착공 현황

구 분	계	이 전 기 관 명
부지매입	15	한국전력공사, 한전KDN, 한전KPS, 전력거래소, 한국농어촌공사, 농식품공무원교육원,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방송통신전파진흥원, 국립전파연구원, 우정사업정보센터,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해양경찰교육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청사착공	14	해양경찰교육원('11. 1월), 우정사업정보센터('11. 3월), 한국전력공사('11. 9월), 전력거래소('12. 1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전KPS('12. 2월), 한국농어촌공사('12. 3월), 국립전파연구원('12. 3월) 농수산식품유통공사('12. 3월), 농식품공무원교육원('12. 4월) 한전KDN('12. 4월), 한국콘텐츠진흥원('12. 11월), 한국문화예술위원회('12. 11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12. 12월)
청사준공 및 이전	1	우정사업정보센터('13. 3월)

2011년 1월 해양경찰학교를 시작으로 우정사업정보센터 등이 청사를 착공함으로써 혁신도시 건설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켰으며, 이전기

관 중 가장 규모가 큰 한국전력이 2011년 11월 2일 착공식을 가졌다. 현재 혁신도시 건설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2013년 3월 4일 우정사업정보센터가 이전을 완료하였다. 하반기에는 해양경찰교육원과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이 이전을 완료할 예정이다.

아울러 빛가람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자회사 등이 함께 나주로 이전토록 이전기관 등을 방문하여 투자유치를 전개하고 있으며, 가시적인 성과로 한국전력의 통합IT센터, 한전KPS의 연구개발 복합단지, 한전KDN의 전력IT연구원 등이 동반 이전하게 된다.

다. 부지조성 및 기반시설 추진상황

혁신도시 부지조성공사는 9개 공구 7,327천km²로 100% 완료되었으며,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광역교통계획(진입도로)은 총 4개 노선 7.87km로 사업비 2,204억원이 투입된다.

현재까지 우리 도에서 추진 중인 2개 노선 총 6.28km 중 1개 노선 5.39km(나주역~혁신도시)은 2010년 3월에 착공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나머지 1개 노선 0.89km에 대해서는 예산확보 중에 있다. 또한 시행사 구간인 2개 노선 1.59km는 공사를 착공해 추진중에 있다.

광역교통계획은 호남광역권 내 신성장 동력산업의 중추기능을 담당할 혁신도시의 역할 및 기능을 지역적 한계를 넘어 확장시킴으로써 혁신도시가 호남지역의 중심도시로써 성장하도록 주도할 것이다.

수자원공사가 실시하고 있는 상수도 공사는 공사가 완료돼 용수를 공급 중이며 하수처리 및 오수펌프장 시설은 2013년 10월 준공예정으로 2013년 3월부터 시운전 중에 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 단장 설동진, 이전지원팀장 정기복, 담당자 양완길

6-3. 빛가람 혁신도시건설을 위한 행정지원

가. 이전기관 및 임직원 이전지원계획 수립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성공적 정착 및 혁신도시건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자 이전지원계획을 수립하였다.

※ 이전지원계획 수립내용은 이전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사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 이전비용.주거안정 지원 및 정주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 기존 지역주민과의 화합 및 융화에 관한 사항
- 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에 관한 사항
- 산.학.연 유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등

이 계획이 완료되면 이전 공공기관과 종사자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한편으로 공공기관의 기능적 특성과 지역전략산업 및 혁신클러스터를 연계하여 광주.전남지역의 특화된 경쟁력이 도모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 혁신도시 원주민 지원

혁신도시건설지원 특별법 개정('08. 1. 18.)으로 제47조의2 규정에 의거, 혁신도시 건설로 생활기반을 잃은 이주민의 생계안정과 재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혁신도시개발업체 및 이전기관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기능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 앞서 이주민의 직업전환훈련 희망자를 분야별로 수요 조사를 실시해 조정, 중장비 등 5개 과정, 19명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하여 이주민의 재취업을 도왔다.

아울러, 원주민 지원사업 일환으로 사단법인 “빛가람”을 설립하여 혁신도시 조성지역 내 지장물 철거, 관정폐공, 무연분묘이장 등에 참여시켜 생계를 지원하였다.

다. 이전공공기관 임직원남도문화탐방 실시

우리 도내로 이전하는 16개 공공기관(해양경찰학교 포함)의 임직원과 가족들을 초청, 남도문화탐방 행사를 추진하여 우리 지역에 대한 이미지 제고 및 이전지역 주민과의 상호 유대 강화를 위해 2006년부터 실시했다.

현재까지 19회에 걸쳐 이전공공기관 임직원과 가족 1,200여 명을 광주광역시와 전남도, 나주시가 공동으로 초청하여 천연염색문화 체험, 순천만정원박람회 관람, 명승·유적지 답사, 가족단위 체험행사 등 문화탐방을 했다.

이러한 탐방행사는 이전기관 임직원 및 가족에게 이전지역에 대한 이해와 일체감 형성으로 안정적인 생활과 조속한 이전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전기관 관계자들이 우리지역에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추진
부서

혁신도시건설지원단 단장 설동진, 이전지원팀장 정기복, 담당자 김동철

6-4. 빛가람 혁신도시 정주여건 조성

공공기관 종사자 및 가족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고 혁신도시를 광주·전남의 혁신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교육·문화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나주시에서는 혁신도시 내 문화복지시설 용지에 부지 9,157㎡, 연면적 8,400㎡ 규모로 ‘빛가람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을 계획 중이다. 소공연장, 문화·창작미디어실, 수영장, 에어로빅, 요가, 휘트니스센터 등이

들어가게 될 시설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였고 정부재정계획에 반영하여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건의 중에 있다.

전라남도교육청에서는 2018년까지 13개교(유치원 3, 초 5, 중 3, 고 2)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를 위해서 ‘미래형 선진학교 시설 및 운영모델 개발 용역’을 실시하여 혁신도시 설립학교에 적용할 U-스쿨시스템, 범죄예방 디자인, 탄소제로 시설 등을 개발하였다.

또한 혁신도시로 이전하게 될 이전공공기관들은 자체적인 문화·복지 시설을 갖추고 혁신도시 주민들에게 개방 가능 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 단장 설동진, 이전지원팀장 김정섭, 담당자 이기석

6-5. 앞으로 계획

빛가람 혁신도시는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전략산업을 연계하여 지역 발전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궁극적으로 산·학·연·관 연계를 강화하는 산학연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산학연 클러스터는 11개 블록, 448,078㎡(전체 면적의 6.1%)로 조성될 예정으로 에너지 클러스터, 농생명 클러스터, 정보통신 클러스터, 문화예술 클러스터로 이루어진다.

〈표 2-368〉 산학연 클러스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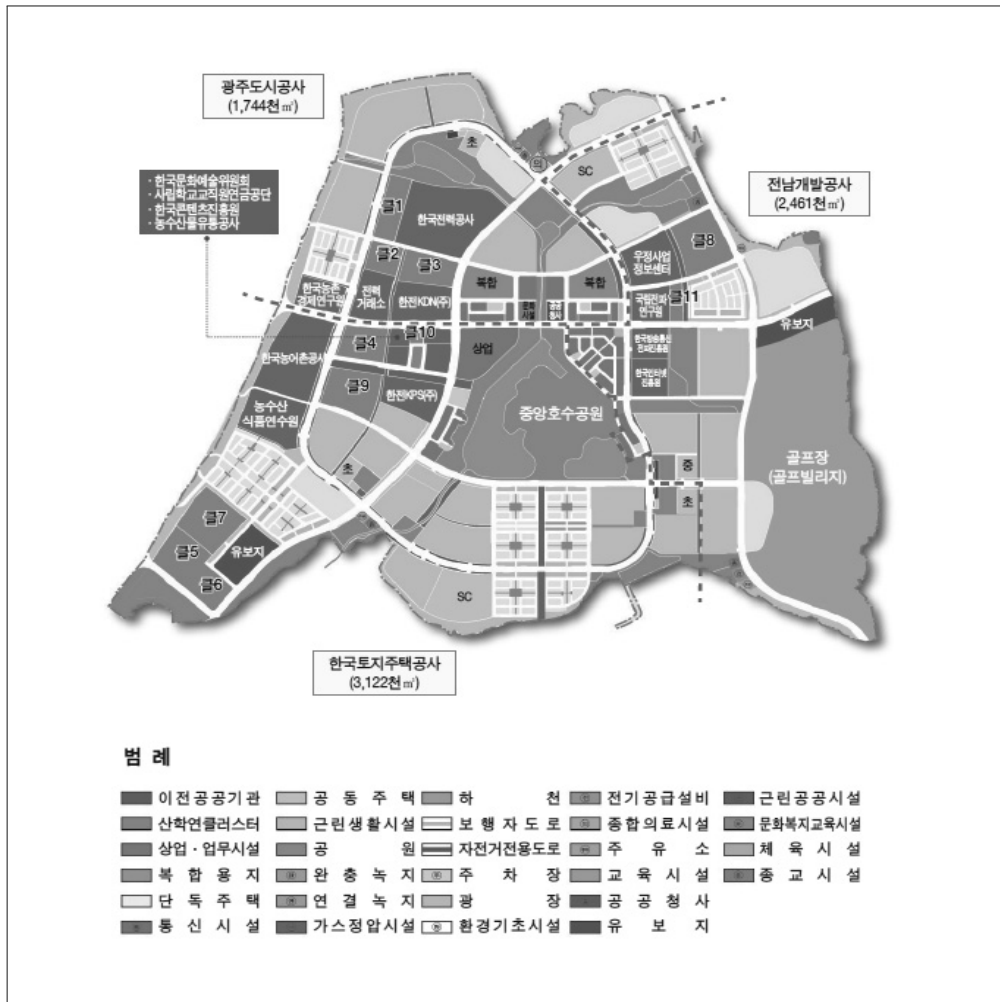
구 분	이 전 기 관 명
에 너 지(4)	한국전력공사, 한전KPS(주), 한전KDN(주), 한국전력거래소
농 생 명(4)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수산물연수원
정보통신(4)	우정사업정보센터, 국립전파연구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문화예술(3)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산학연 교류협력을 통한 지역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신재생 에너지 관련기업을 우선적으로 유치하는 한편, 최근 추세에 따라 4개 기능군의 인접 배치 효과를 살려 융복합 산업의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전라남도는 모두가 꿈꾸고 누구나 살고 싶은 정주여건을 갖춘 명품도시, 최적의 투자환경을 갖춘 기업하기 좋은 혁신도시를 건설할 계획이다.

추진
부서

혁신도시건설지원단 단장 설동진, 이전지원팀장 정기복, 담당자 김동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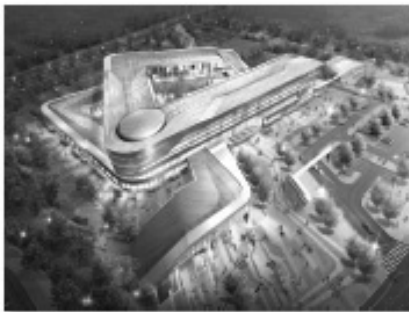
이전공공기관 청사 조감도



한국전력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우정사업정보센터



한국판텍초진흥원



한국농어촌공사



한전KDN

이전공공기관 청사 조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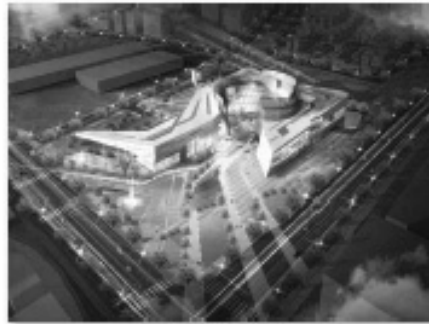
한진KPS



한국전력거래소



농수산식품연수원



국립전파연구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